

UNINOMIC

VOL.2 No. 2

REVIEW

이슬람과 한국의 생존전략

우리기업의 對 이집트 진출 제언
김유정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와 한
국과의 경제협력발전방안
박해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우리의 생존전략
서정민

이슬람 경제란 무엇인가
손성현 외 1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 배경과 전망
유광호 외 1인

위기의 이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
구기연

이라크
이수정

SPECIAL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제조업의 생존전략
김영훈

주력산업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주 원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2 No.2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 2 No. 2

목 차

RESEARCH ISSUE

우리기업의 對이집트 진출 제언 | 김유정

터키의 현황 이해와 한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 박해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우리의 생존 전략 | 서정민

이슬람 경제란 무엇인가 | 손성현 외 1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 배경과 전망 | 유광호 외 1인

위기의 이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구기연

이라크와 한국의 생존전략 | 이수정

CURRENT ISSUE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제조업의 생존전략 | 김영훈

주력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 주 원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진출 제언

김유정*

1. 들어가며

우리에게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피라미드가 아닐까 한다. 현지에서 피라미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대로 된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일종의 경외감이 드는 반면, 한편으론 이집트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이집트인들의 조상일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낮은 민도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만연된 관료주의와 부패로 1억의 인구가 제대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11년 1월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30년 장기집권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고 이후 국민투표로 모르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그동안 민주주의 실천경험이 없다보니 혼란만 거듭되다가 급기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2014년 6월 군부 출신의 압델 파타 알시시가 집권함으로써 이집트는 또다시 군부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경제 또한 관광, 수에즈운하 등을 통해 연간 30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를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동안 집권자는 물론 일반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제대로 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경제를 이들 외환수입원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혁명 이후 치안부재로 관광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침체로 수에즈운하 수입마저 줄어드는 등 외환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자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016년 11월 IMF로부터 120억 달러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실정에 이르렀다.

* 前 KOTRA 카이로무역관장

알시시 정부는 언론 통제를 비롯하여 2014년 4월 알렉산드리아 및 탄타 지역 콕트 교회 테러로 40여명이 사망한 후 테러분자 색출 명목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는 등 무바라크 때 보다 더욱 강력한 철권정치를 실시하고 있어 국민들로 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으나 이미 민주 정부 실패경험이 있는 이집트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 경제적으로도 IMF 관리감독 하에서 초강도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을 받다보니 국민들의 삶도 고단한 지경이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요충지, 북아프리카의 제조 허브, 인구 1억의 거대 내수시장 보유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집트에 우리는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여 왔고,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생산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상 자동차의 약 50%가 현대기아차로 메우고 있는 등 우리에게 나름 괜찮은 시장이었으나 작금의 외환 부족 사태는 우리 기업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외환이 부족하다보니 프로젝트 시장은 발주방법 변경 및 연기가 잇따르고 있고, 상품수입도 외화반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수입규제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이집트의 경제현황 및 전망을 자세히 살펴본 후 우리의 대 이집트 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아집트 경제현황 및 전망

1) 허약한 경제 구조로 외환 부족사태 초래

<표 1-1> 이집트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27,255	31,528	29,339	28,735	26,771	21,354	21,860
수 입	52,814	62,156	69,846	66,259	70,879	74,370	59,896
수 지	-25,559	-30,628	-40,507	-37,524	-44,108	-53,016	-38,036

자료: 이집트 통계청(CAPMAS)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이집트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다. 이는 산업이 변변치 않음을 의미하는데, 인구 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이집트의 산업이 왜 발달되지 않았을까? 현지 영자신문인 Daily News Egypt(2016)에 의하면, 사다트 대통령 통치(1970-1981)시 제조업 발달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외 개방 및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때부터 무역적자액을 관광수입, 수에즈운하 통행료,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피라미드의 저주」라고도 하지만 조상덕분에 막대한 관광수입이 손쉽게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공장을 돌리겠냐는 것이다.

이 같은 허약한 경제 구조는 2011년 혁명 후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관광수입이 혁명 이후 지속된 정정불안, 테러 등으로 치명타를 입음으로써 외화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테러는 잇을만하면 일어났고, 특히 2015년 10월 시나이 반도에서의 러시아 여객기 폭파테러는 관광객의 발길을 아예 뚝 끊어버렸다. 최근 중국인을 위시한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혁명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요원한 실정이다. 관광수입은 혁명 이전인 2010년 125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50억 달러도 채 안 되고 있다. 수에즈운하 수입도 세계 경기 침체로 줄었다. 알시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야심차게 제2 수에즈운하를 착공해 1년만인 2015년 8월에 개통했다. 양방향 운항으로 통과시간이 7시간 단축되고 물동량도 2배 늘어 통행수입이 연간 50억 달러 수준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세계시장 위축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수입은 오히려 예년 수준보다 못하다. 여기에는 국제유가 하락(Bunker Fuel 가격이 2015년 5월 MT당 400 달러이던 것이 2016년 3월에는 150 달러로 대폭 인하)와 불안정한 예멘 정국도 한몫 했다. 비싼 통행료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에즈를 통과하는 것 보다 기름값이 싸니 차라리 희망봉을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 역시 감소했다. 주로 걸프국과 아프리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우디 및 리비아 파견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으로 건설현장이 중단되었고, 리비아에서는 2015년 2월 IS의 이집트 콥트교도 집단 참수 사건으로 리비아 내 이집트인들이 전원 본국으로 송환됐다.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사우디 등 이웃 걸프국들의 원조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자신들의 코가 석자다 보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동안 의지해 오던 외화 수입원들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집트는 심각한 외환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혁명 전 360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환 보유고는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IMF로 부터 긴급자금 지원을 받기 전에는 16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이집트 정부는 3개월 어치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IMF에 손 내밀게 되었다.

2)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IMF에 손 내밀어

혼란만 키운 중앙은행의 어설픈 외환 통제

혁명 이후 외환이 부족하자 이집트 중앙은행은 외환 통제를 시작했다. 우선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송금을 제한했다. 2011년 2월 중앙은행은 개인의 경우, 별도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송금한도를 10만 달러로 제한했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과실금 송금을 전면 금지하는 반면 물품 수입 대금은 은행에 잔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관련서류 제출 시 허용하였다. 투자 과실금 송금이 중단되자 신규 투자 중단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도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져 외환부족을 더욱 부추겼다. 2014년 1월 중앙은행은 기업의 과실송금 제한은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송금 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1년에 10만 달러까지 허용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10만 달러를 송금한 개인은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더 이상 추가송금을 못하던 것을 이를 1년에 10만 달러로 완화하였던 것이다.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던 이집트에서 달러 부족으로 현지화(이집션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혁명 이전인 2010년 1달러 당 5.62 파운드 이었던 것이 IMF 자금지원 조건으로 단행된 변동환율제 직전인 2016년 10월에는 8.79 파운드 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평가절하 이면에는 은행 공식 환율보다 1.5~2배 정도 차이가 난 암시장 환율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암시장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들이 수입물품 대금 마련을 위해 널리 이용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은 암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암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한편, 암시장 규모 확대에 당황한 중앙은행은 이를 척결하겠다고 2015년 2월 입금제한 조치를 단행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하루 1만 달러 한 달 5만 달러로 입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암시장에서 달러를 마련해도 은행에 입금시킬 수 있는 금액을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암시장에 타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론 수입이 억

제됨으로써 시장에는 물품 품귀현상이 초래되었다. 수입물품 대금이 은행을 통해 결제 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제한되다 보니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수입이 안 되어 공장이 멈추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같은 입금제한 조치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로 2016년 1월 식품, 의약품, 생산설비, 원자재 등 필수품목 수입업자에 한해 월 25만 달러까지 상향되었고, 2016년 2월에는 필수품목 수입업체 중 수출업체에 한해 월 1백만 달러까지 상향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에 비필수품목 수입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상향되었다. 갑자기 개인에게도 무제한 상향조정된 이유는 개인들의 장롱 속 소지 달러를 은행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비필수품목 수입업자에게는 월 5만 달러 입금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 되었다.

이 같은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집트는 결국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IMF 체제하에서 해외 차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점차 늘어나자 2017년 6월 송금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기업의 과실송금이 자유화되었고, 비필수품목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입금제한조치도 2017년 11월 완전 해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송금 시에는 자금출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잇따른 수입제한 조치에 물가만 올라

이집트 정부는 또 다른 외환통제 수단으로 각종 수입 억제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상기에서 언급한 입금제한 조치를 비롯하여 관세인상, 생산 공장 등록제, 수출서류 은행 간 송부 등 각종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생산 공장 등록제란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 억제를 위해 이집트에서 자체생산 가능한 25개 품목을 이집트로 수출코자 하는 해외기업은 수출품 제조 공장을 이집트 통상산업부 산하 수출입청(GOEIK)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서, 2016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상당수가 해당되었는데, 정부의 수입억제 의도가 깔려있다 보니 등록이 매우 까다로워 현재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서류의 은행 간 송부는 T/T 거래의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야만 외환송금을 인정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신용장거래야 당연히 관련 서류들이 은행을 통해 송부되고 있지만 T/T 서류는 통상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고 있었던 터라 시행초기 T/T 거래의 경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신용장 거래는 자신들이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자 은행에게 서류를 보내주고 있지만 T/T 서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다 하여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협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도 수출서류의 수출지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세인하 목적의 인보이스 금액 다운밸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수입억제로 물자가 귀해지자 물가만 올라 일반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 졌다.

3) 지금은 IMF 시대, 경제개혁 중

중앙은행의 금융통제 및 각종 수입억제책 시행을 비롯하여 사우디 등 인근 걸프국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자체 외환수입원의 증가가 없자 결국 이집트 정부는 외환 부족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2016년 11월 11일 마침내 자금지원이 결정된다. 지원내역은 확대금융창구(Extended Fund Facility: EEF) 프로그램 하에 120억 달러 자금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이집트로서는 IMF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는 EEF 프로그램이 3년 동안 반기별로 상호 합의한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행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분할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IMF는 자금지원 선제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도입(2016.10.1), 변동환율제 도입(2016.11.3), 전기세 등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 지속 감축 등을 요구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10% 판매세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세수증대 및 탈세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GDP 성장률이 6% 이상 돼야 도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4% 이하에 머물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만 부추겨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을 궁핍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다. 여하튼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이원화시켰는데, 도입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6월말까지는 13%를 부과하였고 그 이후부터 14% 부과하고 있다.

변동환율제 도입은 환율의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조치였다. 도입 전 은행 공식 환율이 달러당 8.79 파운드였으나 암시장 환율은 2배 가까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변동환율제 도입과 동시에 제시한 가이드 라인 환율은 14.60 파운드였으나 하루만에 17파운드대로 상승하였고 이후 18파운드 대를 형성하다가 최근에는 17.70파운드 대에 머물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IMF가 요구한 또 다른 하나는 전기세, 유류세 등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다. 보조금은 전체 정부지출 비용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서 이중에서도 전체 보조금의 60%를 차지하는 전기세는 2014년부터 5개년 계획 하에 자체적으로 삭감추진중이다. 여하튼 보조금 덕분에 싼값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들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밖에도 세수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부과, 소득세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당시 주식시장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여 2017년 5월까지 2년간 유예되었고 이를 다시 3년간 추가 유예 시킨바 있다.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법을 지난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개정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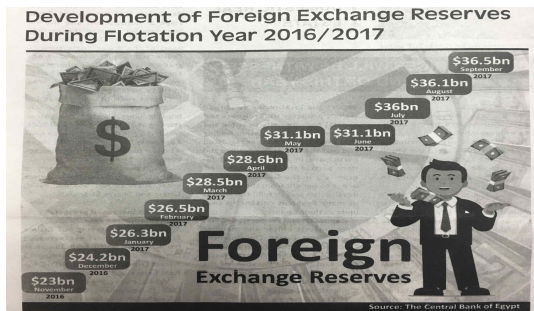
IMF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소비자 물가는 30% 이상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 졌다. 한편, 물가상승요인이 통화 공급량 과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지화 환율하락, 주요 보조금 삭감, VAT 도입,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이자율 인상만으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해외발행 채권한도액을 종전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까지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외환보유고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체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다른 개혁성과 없이 부채만 키운 그리스와 같은 상태로 전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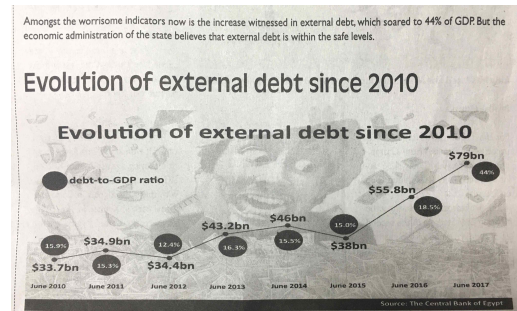
IMF 체제 1년이 경과 된 현 시점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외환보유고가 2017년 9월말 365억 달러로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직전인 2017년 10월말 160억 달러 대비 205억 달러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외부채 역시 2017년

6월말 790억 달러로 2016년 6월말 558억 달러 대비 232억 달러 늘어났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관광, 수에즈운하 등 순수 외화수입에 의한 증가보다 해외로부터 차관도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는 IMF로부터 120억 달러 지원 이외에도 월드뱅크 30억 달러, 아프리카 개발은행 15억 달러 등의 차관을 지원받고 있으며, 70억 달러 해외채권도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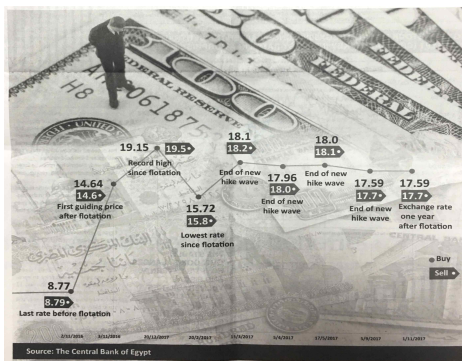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인플레이션은 2016년 11월 20.7%에서 2017년 9월 현재 33.2%로 상승하는 등 극심한 물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더해져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역시 자금의 외환 보유고에 힘입어 달러당 17.70 파운드 내외로 등락거리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언제 급등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집트 경제문제는 외환부족에서 발생되었다. 다시 말해 외환이 확보되지 못하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지표에서 보듯 최근 외환보유고 증가와 동시에 외채증가가 뒤따르고 있어 관광 등 순수 외화수입원 증가 없이는 외환 부족 사태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집트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운항 중단되었던 러시아 여객기 또한 조만간 재개한다 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FC가 발표한 2017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이집트는 190개 국가 중 128위에 머무르고 있어 해외투자

(FDI) 유치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수에즈운하 수입도 세계 경기 회복여부에 달려 있다. 근로자 송금도 단기간 내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의 네옴프로젝트 등 주변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한 조흐르 가스전이 2017년 12월부터 생산되고 있어 조만간 예전처럼 가스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는 가스수출국이었으나 2013년부터 외국계 기업의 가스 생산 중단으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기대심리로 인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민심이 흉흉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는 2018년 상반기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최근 이집트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는 선거를 의식해서 인지 모두 긍정적이다. 심지어 IMF 마저도 인플레이션이 2019년에는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 최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의 활성화 없이는 경제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1) 이집트 진출환경 SWOT 분석

<표 1-2> 이집트 진출환경 SWOT분석

Strengths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요충지 - 인구 1억의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와 부패 - 경직된 투자환경 및 노동법규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의 높은 인구비중 - Post BRICs 국가로서 성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불안 요인상존 - 외환부족으로 IMF 구조 조정중

2) 진출전략 및 확대방안

인프라 및 프로젝트 사업 참여시 신중을 기해야

이집트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고, EU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 기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IMF 사태 이후에는 사업 건수마저 급감하고 있다. 설상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 금융을 동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 공여 시 좋은 조건까지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우리기업이 메트로 5호선에 차관혼합(EDCF + 수출금융)으로 참여 예정이나 이집트 측에서 수출금융의 낮은 이자율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수출금융을 EDCF나 ODA(양허성 차관) 정도의 조건으로 달라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재원이 외부자금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4년 메트로 3호선 3단계 구간 감리 및 컨설팅 제공 사업이 국제입찰로 나와 우리나라 D엔지니어링사가 낙찰되었으나 경쟁사인 프랑스 업체의 의제기로 결국 눈물을 흘려야 했다. 왜냐하면 재원이 유럽투자은행(EIB) 공여자금이고 자금의 대부분을 프랑스개발기구인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가 출연하다보니 프랑스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국제입찰을 실시해 놓고도 재원조달국의 압력에 굴한 이집트정부의 무능에 D사는 발주처로부터 낙찰통보를 받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한편, 가격인하를 위해 중국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홍해연안에 추진 중인 이집트 최초의 석탄 화력 발전소인 아윤무사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전력과 미쓰비시가 재원조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시공은 한국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기업들과 협상 중에 있으나 이집트는 참여 자격도 없는 중국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맞춰줄 것을 요구 중에 있다.

이처럼 사업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면, 우선 자금동원력을 가진 국가 또는 외국기업들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 일례로 GS건설은 지난 2007년 미쓰이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집트 석유정제플랜트(ERC: Egyptian Refining Co)를 공동 수주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을 중심으로 유럽투자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일본, 홍콩, 프랑스의 상업은행(도쿄미쓰비시UFJ, HSBC, 소시에테제네랄)까지 끌어들여 금융조달에 성공하여 2012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월드뱅크 등 MDB를 활용한 민간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해 보자.

인프라사업 모델은 정부재정사업과 민자기반사업(PPP 등)이 있는데 이중 정부재정사업 참여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상대적 높은 이자율 및 비적극성(단순 Follower)

으로 난망하기 때문에 PPP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 장기화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관건이나 이를 위해 월드뱅크 등 MDB를 활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IMF, 월드뱅크 등)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사업개발을 제시해 보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IMF 등 국제금융은 지원 자금이 경제 개발 및 개혁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고립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친환경 발전기기 납품사업도 좋은 사업 예시가 될 수 있다.

참여가능 프로젝트로는 교통(메트로, 철도), 환경(수처리, 쓰레기처리), 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 분야를 비롯하여 에디오피아와의 댐건설 문제로 설비확충이 필요한 담수시설 등이 있다. 발전분야는 지멘스가 현재 용량의 50%를 2016년 말 수주하였고 완공 시 전력 예비율이 25%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이 없다.

어려울 때 일수록 철저한 시장관리 필요

한국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비행기로 13시간 이상 가야하는 먼 곳일 뿐만 아니라 작금의 외환부족, 치안불안, 각종 수입규제 등으로 인해 이집트 시장을 등한시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최근 이집트시장을 활발히 두드리는 업체는 유럽 및 중국 업체들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자기들 시장이라고 여기면서 그동안 빼앗겼던 시장점유율 만회를 위해 애쓰고 있고,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휘젓고 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멀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여 이집트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를 통해 보안 및 군수용품 시장을 신규로 창출해 보자. 이집트는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정불안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시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IS 추종 세력 및 정권 불만세력에 의한 테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내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집트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도 ‘안전한 국가’로서의 이미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집트 보안용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0월 러시아 여객기 사고에 따라 공항 검색용 장비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이밖에도 국가 기간 및 보안시설 출입 통제 장치, 무인 경비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CCTV와 같은 제품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IT 기술 등을 적용한 원격 제어기능이나 실시간 인식 기능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교통신호체계, 주차 통제 시스템 등도 진출전망이 밝은 분야중 하나이다. 이집트에서 군부는 국가 방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엘시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역시 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군부의 지지율 유지를 위해 군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경을 마주한 리비아에서 IS 추종 세력이 증가하고 있고, 시나이 반도 등에서 반정부 세력의 지속적인 테러로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각종 군용 물품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는 신세대를 공략하자

이집트는 소비에 있어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 하는 극단적인 가격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화된 디자인이나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N사는 파스텔톤 디자인을 앞세운 주방기기 용품을 출시하여 2012년 초도 물량으로 32만 달러 수출 후 3년만인 2015년에는 18배가 증가한 약 611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6년에는 수입규제로 인해 다소 주춤하여 383만 달러에 그쳤으나 오늘날 이집트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최고의 혼수용품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이집트 인구 1억중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신세대가 경제발전에 따른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주방용품, 소형 가전제품, 벽지, 패션의류, 기능성 화장품 등 가정용 소비재의 경우 현지 시장 진출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 브랜드」 활용

다수 가정이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을 소비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이집트에서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시장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집트 구매자들은 한국산 제품이 품질 면에서는 유럽산이나 일본산과 유사한 반면 가격은 이들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한국기업이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원화된 시장접근 구사

이집트는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지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 지출의 4%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상류층은 가격이 아닌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을 기준으로 최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제품 가격을 우선시 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어, 제품의 주 소비층별로 특화된 가격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의 경우 필수기능만을 넣은 저렴한 기본형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상류층 대상으로는 소비자의 편의 및 디자인을 고려한 고급형 제품으로 출시해야 한다.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발전방안 모색

박해선*

1. 들어가며

2017년은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였다. 1957년에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6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 위치한 만큼 물리적인 거리는 멀다. 하지만 두 나라 국민의 정서적 친밀도는 높은 편이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돌궐은 고구려와 형제의 국가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돌궐은 투르크의 다른 발음이며 현재의 터키는 이러한 투르크족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다.

과거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근래에 들어 양국이 친밀한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된 직접적 계기는 다음의 두 가지 사건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이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인명손실을 볼 정도로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애정은 한국인을 칸카르데쉬(터키어로 의미는 피로 맺은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깊다. 두 번째 사건은 비교적 최근인 2002년 월드컵 3,4위전 한국과 터키의 축구경기를 들 수 있다. 터키국민들은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는데 양국 간의 경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양국

* 現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 교수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선수를 함께 응원해준 모습이 터키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터키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친밀감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있어 분명 좋은 자산이다. 더불어 터키는 post-BRICS의 대표주자로 단골처럼 언급되는, 국제사회에 있어 주목받는 신흥경제권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양국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양국 간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방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터키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

터키는 거대 신흥시장 브릭스(BRICS)에 이어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의 ‘포스트 브릭스(post-BRICS)’를 언급하는 다양한 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이다. 즉 터키는 유망한 신흥시장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필수조건인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 시장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터키가 갖는 유망 신흥시장으로서의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지정학적 중요성 측면을 보면 터키는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요지이다. 터키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송유관 및 가스관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를 이어주는 에너지 수송의 허브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1> 터키의 주요 천연가스 수송관*



자료: 터키 외교부

* 파란색 점선은 계획 중인 수송관

또한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터키는 이들 주변 시장의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로 인해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터키는 터키어권 국제기구(Turkish Council)를 주도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회원국과 관계가 긴밀하다. 관광, 언어, 사상, 문화 등에서 지역에서의 선도국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과거 오스만제국의 영화를 재현하기 위한 지역 강국으로서 재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NATO,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회원 국가라는 점은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터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시장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터키는 2016년 기준 인구가 7,981만 명, 국토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3.5배에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7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다. 인구 규모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 다음으로 2위이며, 중동국가 중에는 이집트(95백만 명), 이란(80백만 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5~64세 연령층의 전체 인구 중 구성비는 2016년 기준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으로 양질의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수 및 수출산업의 빠른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 성장 등을 고려할 때 시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터키는 미국과 맞먹는 규모의 세계 최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EU시장은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약 5억 명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이다.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동맹 체결, EU 가입협상 추진 등을 계기로 서방선진국들로부터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다. 서방 선진국들은 EU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기지를 터키로 이전해옴으로써 터키는 유럽의 공장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3. 정치·사회 동향

1923년 터키공화국이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15

년간 집권하며 터키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이슬람교의 영향을 제거하고 정교분리의 세속주의 원칙하에 여러 가지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터키국가 체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현재까지 터키국민들의 아타튀르크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없이 절대적이다. 아타튀르크 사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가 대립하면서 세속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부의 쿠데타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정정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친 이슬람 성향을 지닌 현재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14년까지 터키 현대사에 유례없는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KOTRA, 2018)

반세속, 이슬람 정통주의 성향을 지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하 에르도안) 정부의 반민주적 행보 등에 대한 반발로 2016년 7월 15일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불과 6시간 만에 진압된 바 있다. 1960년 첫 군부 쿠데타 이후 수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모두 성공한 전례가 있다. 터키 군부는 공화국 출범 이래 정교분리 원칙의 세속주의 정책 및 헌법 수호자로 자처하며 정부가 세속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세속주의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부대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쿠데타는 터키 역사상 군부 쿠데타가 실패한 최초의 사례이다. 현재까지 쿠데타 발생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초기 협력자였던 온건 이슬람 성향의 일부 페툴라 굴렌 세력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조기에 진압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쿠데타 모의를 어느 정도 사전에 감지하였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묵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의 군부 쿠데타는 에르도안의 통치강화, 대통령제로의 정치체제 변경, 최대 정적인 페툴라 굴렌 세력을 척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종진, “2016 터키 경제전망: 쿠데타로 변화도 예상, 투르크경제권 이슈, 2016). 쿠데타 이후 정국의 안정을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7월 2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부 및 교육계, 사법계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반정부 인사의 숙청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2016년 12월말 현재 군인, 법관, 언론인, 국회의원 등 약 4만 명이 체포되고 13만 명이 보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다.

터키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4월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이 찬성 51%로 가까스로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터키공화국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의원내각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9년부터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2년간 총리로 연임했던 에르도안 총리는 2014년 8월에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 있는 데, 이번 개헌안 통과로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이 2029년까지 가능 해졌다.

최근의 대통령제 전환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2016년 군부 쿠데타 이후 숙청작업을 통한 공안정국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권여당과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에서는 외환 및 증권시장 등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가속화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빙의 승부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내 정치 불안 요소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터키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는 터키 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쿠르드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쿠르드족의 정체성 문제, 쿠르드족 비중이 높은 터키 동남부 지역의 경제개발,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무력으로 투쟁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이희철, “문명의 교차로 터키의 오늘”, 문학과 지성사, 2012). 쿠르드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와 더불어 최근에는 시리아 및 이라크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IS)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터키정부는 터키 동남부 지역 및 시리아내의 PKK 무장세력과 시리아 및 이라크 내의 IS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금년 들어 시리아내 PKK세력 척결을 위한 터키군의 지상 작전의 전개로 터키는 미국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노정하고 있다.

시리아 및 이라크 난민은 터키의 또 다른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말 현재 터키 내 유입된 시리아 및 이라크 난민의 규모는 약 3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에선 난민들이 터키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터키인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터키가 필요한 농업, 노동집약 산업 등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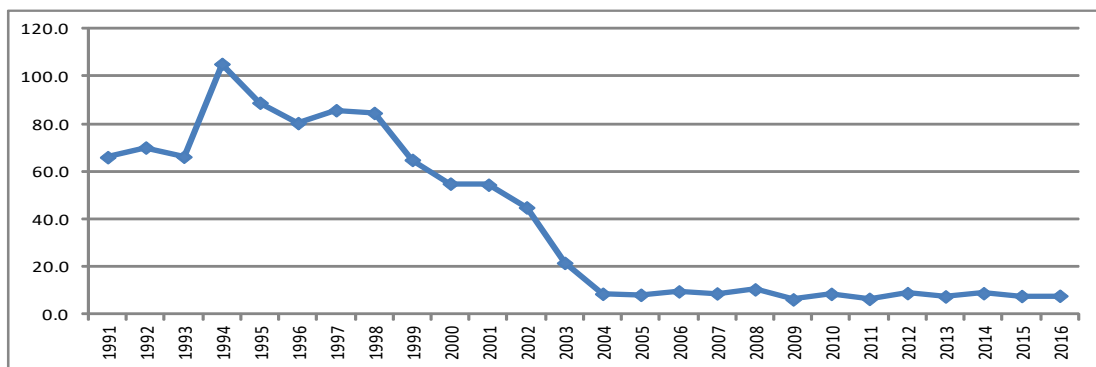
용되어 터키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오종진, 2016).

4. 경제 동향

앞서 언급된 터키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터키 경제는 현재의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집권하기까지 11년간 일곱 차례나 연립정부가 들어서는 등 극심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높은 두 자릿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도 터키경제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2002년 에르도안 총리는 고질적이었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림 2-2>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991~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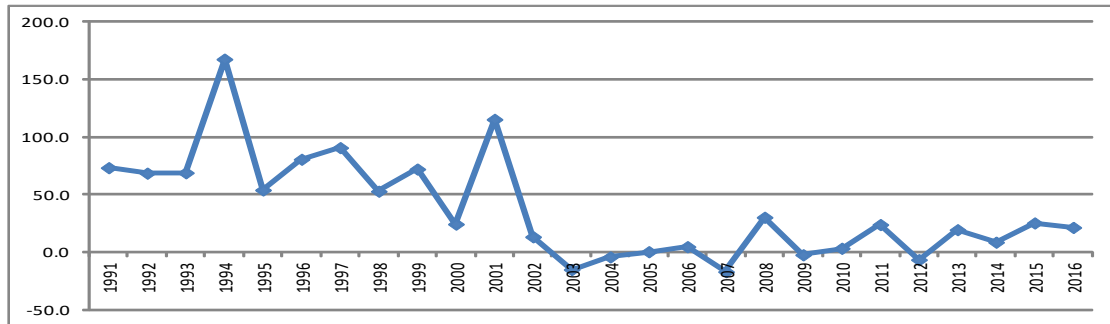


자료: IHS Global Insight

한편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에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은 터키는 2001년 2월 기존의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다. 이후 터키경제의 불확실성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2003년 3월에는 미국 1달러당 터키 170만 리라에 달할 정도로 환율이 상승한 바 있다. 급속한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터키 정부는 2005년 초 1백만 터키리라(TL)를 1터키 신리라(YTL)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환율의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도 에르도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반영하듯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동폭이 축소되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3> 터키 화폐의 대달러환율 변동(연말기준) 추이 (1991~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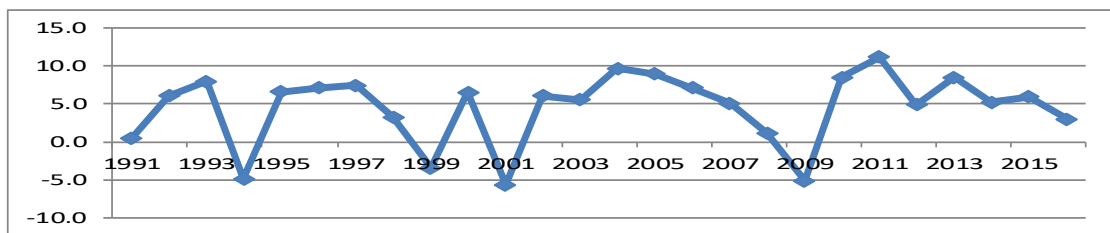


자료: IHS Global Insight

정치 불안정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으로 취약했던 터키경제는 2002년 11월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 정부의 구조개혁과 건실한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높은 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룩하였다. 이에 맞추어 터키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실질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시현한 것과 2016년 쿠데타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제외하고 2002년 이후 터키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터키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991~2016)

(단위: %)



자료: IHS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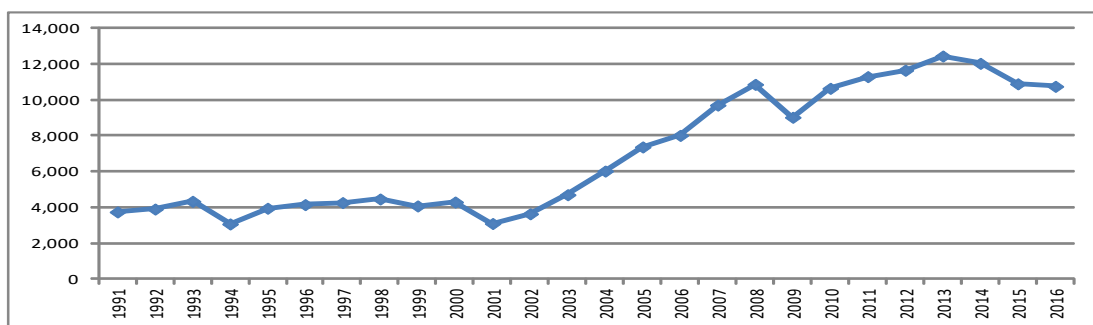
에르도안 정권의 집권초기인 2002년 터키의 일인당 명목GDP가 3,638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4년에 12,035달러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에르도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반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안정적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터키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 11월 터키공군이 자국영토를 침범한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가 대 터키 수입제한, 양국 무비자 협정 잠정 중단, 터키인 고용 제한 등을 내놓으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한 것과 함께 2016년 7월의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숙청 정국의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투자심리 악화 및 테러,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 등은 터키 경제의 주요 악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파로 2016년 4분기 터키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하였다.

<그림 2-5> 터키의 일인당 명목GDP 추이(1991~2016)

(단위: \$)



자료: IHS Global Insight

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터키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2017년 말 현재 아직까지 투기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표 2-1> 주요 국제신용기관의 터키 신용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등급	
Moody's	Baa3(Negative) (2016.7)	Ba1(Stable) (2016.9)
Fitch	BBB-(Negative) (2016.8)	BB+ (2017.1)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2017년 상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2017년 5월 러시아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로 인한 러시아 관광객 유입 재개에 따른 관광산업의 회복,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유럽의 대 터키 수입 수요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시장의 안정, 수출입규모의 회복, 2017년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 주가지수 상승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한편 World bank와 OECD는 2017년 터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각각 종전보다 다소 상향조정한 3.5%와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터키경제의 오래된 과제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라고 할 수 있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관광 및 해외건설 등 외화가득 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회복은 터키경제 회복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주요 경제지표* (2014년-2018년)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목GDP	십억 달러	799.4	719.6	726.0	808.6	880.2
1인당 명목 GDP	달러	12,112	11,014	10,807	n.a.	n.a.
실질성장률	%	5.2	5.9	3.2	5.5	5.5
실업률	%	9.9	10.3	10.9	10.8	10.5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8.9	8.5	9.5	n.a.
재정수지/GDP	%	-1.1	-1.0	-1.1	-2.0	-1.9
수출	백만 달러	157,610	143,839	142,606	153,300	170,000
수입	백만 달러	242,177	207,234	198,601	214,000	236,900
무역수지	백만 달러	-84,567	-63,395	-56,089	-60,700	-66,900
경상수지	백만 달러	-43,597	-32,118	-32,564	-32,660	-36,564
환율(연평균)	대미달러	2.188	2.720	3.020	3.628	3.744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28	176	123	n.a.	n.a.

자료: 터키 통계청, 터키 경제부

외국인투자자들이 보는 터키의 투자매력에는 향후 EU 가입 가능성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터키공화국 수립이후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친미, 친 서방 기조의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지역의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에 힘입어 터키는 EU와 1996년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1999년 준 회원국 자격을 얻은 바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정치·사회 개혁을 통해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2005년 공식적으로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그리스, 남키프로스공화국,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등의 반대로 그간 별 진전이 없었다.

2015년 남북 키프로스 간 평화협상의 진전, 시리아 난민 지원 및 EU 유입 방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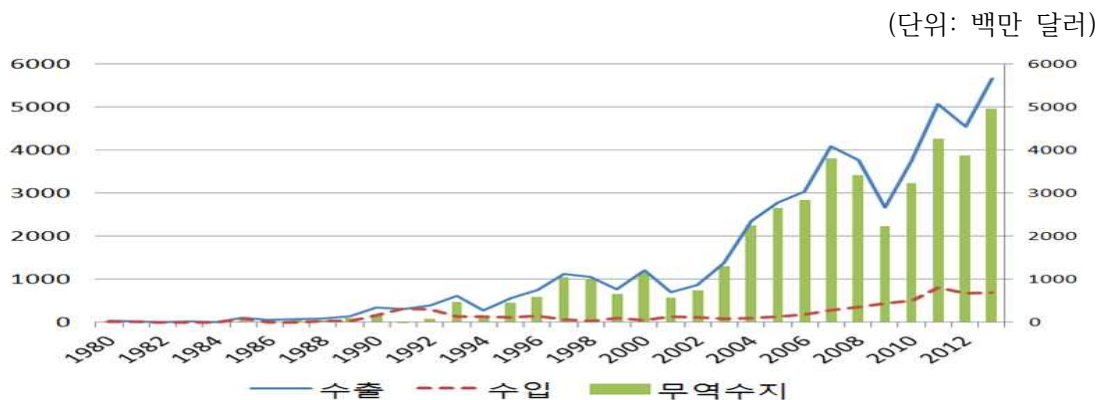
* 2017년은 추정치며, 2018년은 전망치임.

책과 관련하여 터키와 EU간 협력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공식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협상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201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터키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숙청, 과도한 언론 탄압, 사형제도 재도입 논란 등으로 유럽의회가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터키의 EU 가입을 향한 여정은 다시 미궁으로 빠진 상태이다. 한편, 20년이 경과된 EU와의 관세동맹 역시 갱신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5. 한국과 터키의 경제교류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과 터키의 교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역규모가 증대될수록 한국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증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6> 한국의 대 터키 수출입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6년 기준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열연강판 등 산업용 원자재, 부품, 시설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터키 수입 품목은 주로 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1992년 (주)카스가 이스탄불에 전자저울 판매 법인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현대자동차의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2003년 현대로템(주)의 전동차량 생산 합작법인 등 한국기업의 대 터키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기업의 대 터키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2년과 2013년이며 터키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2015년과 2016년에는 현지법인 투자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에 한국기업의 대 터키 투자 진출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 터키 투자누적신고금액은 25억 달러, 누적 현지법인 수는 129개, 투자신고건수는 507건으로 집계된다.

<표 2-3> 한국의 대 터키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개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신고금액	292	179	106	181	740	87	2,506
+신고건수	45	57	48	44	35	19	507
신규법인수	11	18	6	5	9	5	1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한국기업이 터키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로 2016년 완공된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현대건설과 SK건설 시공), 2017년 완공된 이스탄불 해저터널(SK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차나칼레 대교(대림, SK건설), 카라프나르 태양광 발전소(한화큐셀) 등 2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산매출액 기준으로 선정된 터키의 500대 제조기업 중에서 8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의 현지합작법인인 현대아산(HYUNDAI ASSAN), 터키 내 전동차량의 생산·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대로템(주)의 현지합작법인인 현대유로템 등은 대표적인 한국기업 터키 투자 진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터키 FTA는 상품분야협정이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투자 및 서비스분야 협정이 2015년 2월 정식서명과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 준비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상품,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교역규모가 보다 확대되고 투자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한국과 터키의 경제협력 방안

터키는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국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터키는 이스탄불 제3공항,

* 2017년은 상반기 추이.

유라시아 해저터널 및 보스포러스 제3대교 등 대형 프로젝트를 민관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추진한데 이어 2023년까지 총 3,2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교통 등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주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국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동향, 2017. 6). 추진 예정인 터키 내 주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4> 주요 대형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명	추진현황
이stanbul 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부 인프라청 주관 하에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동 프로젝트는 개발부의 2017년도 투자계획 내용 중 하나로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연구 중 - 2017.5월 현재 동 운하의 깊이 25m, 넓이 400m, 길이 43km로 계획되고 있으며, 운하의 양쪽에는 약 10만호의 거주지가 조성되는 신도시 건설(추진주체 : TOKI, 터키 주택청)이 함께 검토되고 있음. - 또한, 6개의 대규모 교량 건설(추진주체 : 교통부 도로청)을 통해 운하의 횡단 및 양측 신도시 간 연결이 추진될 예정. - 동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200억불로 추정
3개 층 그랜드 이스탄불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4월 교통부 인프라청에 의해 실시된 엔지니어링 및 설계 조사 용역이 발주되었고, Yuksel Project라는 터키 기업에 의해 낙찰되어 5월 현재 동 사업에 관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 조사가 진행 중 - 동 터널은 2개의 차량용 도로 및 철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길이는 약 6.5km, 해저 약 100m 구간에 건설될 예정. - 동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35억불로 추정. - 예비적인 엔지니어링 설계는 2018.4월까지는 완료될 예정.
이즈미르 베이 크로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프로젝트는 일명 ‘이즈카라이(IZKARAY)’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진 이즈미르 해협 구간을 터널 및 교량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임. - 2017.5월 현재 동 프로젝트는 토지개발 작업이 완료되었고, 2017.3월말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어 입찰 준비 중인 상태. - 동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i) 2×3노선 고속도로 12.6km, ii) 2×1노선 철로 16km, 450m 사장교(총 계획연장 4,175m), 1,903m의 해저 침매터널, 약 800m 길이의 인공섬 등의 건설을 포함. - 총 사업비는 약 15억불 규모로 추정.
제3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의 세 번째 원전사업 계획은 흑해 지역인 이네아다(Igneada) 지역이 건설 후보지로서 총 5,000MW 규모 용량을 갖춘 약 200-220억불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음. - 2016년 중국과 동 사업에 관한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2017.5월 현재까지 입찰 관련 계획 등은 전혀 알려진 바 없음. - 아나톨루 에이전시 등 일부 언론에서는 제3원전이 중국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에 의해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최근 웨스팅하우스의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검토되던 계획(중국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건설협력 논의)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압신-엘비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4월 발표된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할 경우

화력발전 프로젝트	터키의 석탄 매장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당초에는 동 지역의 화력발전 프로젝트는 총 100-120억불 규모로 검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우선 50억불 정도로 초기 시행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 검토 중
풍력 신재생에너지 (YEKA) 프로젝트	- 2017년 3월 우리 한화큐셀 및 칼론(Kalyon)등이 수주한 1,000MW규모 태양광 발전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어 터키 에너지부는 대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

자료: 주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터키의 건설 산업은 터키 GDP의 약 8.8%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터키 내의 추진 예정인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은 터키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터키의 장기 경제발전 계획에 따른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터키의 경제개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터키와 전통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터키건설기업과 한국기업이 동반자로서 공동 진출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터키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터키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르노, 포드, 현대, 피아트, 도요타 등 5대 글로벌 메이커는 터키에서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수출물량 생산거점으로 터키를 활용하고 있다. 2016년 터키 내에서 생산된 차량 중 약 77%(약 110만대)가 해외로 수출되었으며, 대 유럽 수출은 그 중 65만 대를 차지하고 있다(KOTRA, 2018)

한국의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업체의 터키 진출을 통해 양국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이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터키의 생산 대기업은 주로 부품 및 소재를 아웃소싱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내수 공급 또는 수출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있어서 터키 대기업의 소재부품 수요를 한국기업이 맞추어 주는 산업간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동반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와 한국의 우호적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 분야 이외의 교류는 최근

들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의 신진 연구자, 그리고 대학생 교환프로그램 등과 같은 젊은 세대 간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적 관점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양국 간의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및 발전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크로드 지역, 즉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유라시아지역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동반진출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n ways to enhance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urkey and understanding of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urkey

Hae Seon Park

Turkey is a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80 million and territory 3.5 times the size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is also a member of NATO G20, and OECD and has always been regarded in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n important emerging market in terms of geopolitical advantage, market potential, and accessibility to a greater market. It is geopolitically important because it is located at the center of Europe,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is a critical point of transportation. The role as the hub of energy transport between Europe and Russia or Central Asia is expected to expand even more in the future.

The proportion of youth in the population and the high quality of skilled labor also contribute to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omestic market. The Turkish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becoming one of the world's 10 biggest economies by 2023, which will be the 100th year since the Turkish Republic has been established, and i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large scale projects such as energy,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Furthermore, Turkey has a neighboring massive market, EU market, with great purchasing power, which makes it a desirable production base for global enterprises with the purpose of entering the European market.

For the past few years Turkey has experienced temporary slowdown in economic growth due to the 2016 military coup and the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ituation caused by extensive eradication of antigovernment figures, acts of terrorism committed by the PKK and IS, and poor results in the tourist industry caused by deteriorated relationships with Russia. After early 2017, lesser political instability, recovery of tourism, and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restoration has ensured steady recovery of the Turkish economy.

South Korea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urkey's economic growth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urkey's planned large scale projects. Turkey's construction industry is a crucial one which comprises 8.8% of the GDP and possesses

substantial competitive edge. Korean companies can consider collaborating as partners with Turkish companies on construction projects in Turkey. Further, the partnering with Turkish companies for business opportunities of construction projects in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is also to be considered. Korean companies can also provide parts and materials for one of the biggest export businesses in Turkey,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eek an opportunity for mutual benefit and co-prosperity.

It is important to increase cultural exchange on a private level with governmental support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for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is also important to arrange a system of people to people exchange for the younger generations which will help form a human network that can strategically further the partnership.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한국의 생존전략

서정민*

1. 들어가는 말

중동이 정치역학이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정의 가장 핵심이었던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이 사실상 종료되고 있으나 역내 혼돈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테러의 확장(outreach) 현상이 시리아와 이라크 주변 중동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1월 24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의 한 모스크에서 발행한 IS 연계세력 율라야트 시나이(Wilayat Sinai)의 폭탄공격 및 총기난사 테러로 305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IS 격퇴과정에 이라크와 시리아 당사국과 다양한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중동은 새로운 양상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격퇴작전 과정에서 중동은 이란과 사우디 두 축으로 분열되고, 그 뒤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거대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종식된 냉전의 경쟁구도가 다시 중동에서 신(新)냉전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Gause, 2017).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실상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의 이전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언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동 내 미국의 전통적 맹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대적인 숙청작업에도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사우디-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전략적 동맹 구축을 위해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권력 계승과 장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본 연구는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역내 종파 간 갈등과 신(新)냉전 형성을 두 가지 변수로 접근하고자 한다. 잠재적 강자 이란의 귀환이 가장 강력한 역내 변수이고, 각국의 정권생존(regime survival)이 국내 변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란의 귀환과 정권생존의 당면한 과제가 중동 지역 내 종파 갈등의 확산 및 신 냉전체제 형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가설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변수를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중동의 정치적 현상과 역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주도세력 없는 IS 격퇴 작전

2014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IS 격퇴 목적의 인히어런트 리졸브 작전(Operation Inherent Resolve)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69개국이 동참하는 다국적 연합군은 IS 장악한 영토의 대부분을 수복했다. 하지만 격퇴 과정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이란의 조력을 받고 있는 부패한 이라크 중앙정부군 대신 쿠르드족을 지상전 주도 세력으로 선정하고 훈련 및 장비지원에 집중했다. 2016년 10월 17일 공식적으로 시작된 모술탈환 작전과 2017년 6월 초 본격적으로 진행된 라카 탈환전도 연합군의 공습과 정보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쿠르드 주도의 지상전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냈다.

제한적 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한 버락 오바마 및 도널드 트럼프의 IS 격퇴전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쿠르드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라크의 페슈메르가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주도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IS 격퇴전의 실질적인 중심세력으로 전투를 주도했다. 갈등의 주체인 이라크 및 시리아 중앙정부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역내 안정에 있어서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정부의 대응에 ‘정통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과 충돌의 이해당사자인 특정 세력 쿠르드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활용은 향후 이라크 및 시리아 안정화 작업에 있어 패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쿠르드족의 부상에 우려를 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중장기적 갈등의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Chulov 2017). 시아파 및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 간 민족·종파적 반감과 충돌이 점철된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에서 쿠르드족이 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면

서 양국의 안정화에 불안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를 주도하는 시아파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국을 장악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치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배제된 수니파 세력의 크고 작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군이 많은 국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명확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IS 격퇴 작전은 혼돈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국가와 세력이 참여하고 있고 주도세력이 불분명한 상황이며 따라서 향후 안정화 작업에서도 난항을 거듭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도적인 중재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10월 20일과 25일 파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5개국 국방부 장관이 모술 탈환 작전과 향후 IS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고, 2017년 말에도 제네바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방 주도의 회의와 논의가 큰 영향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등 서방이 이라크 IS 격퇴작전에만 집중하고 시리아 중앙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은 러시아-터키-이란 주도의 해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 터키, 그리고 이란이 주도하는 시리아 사태 중재국이 2017년 5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De-Escalation Zones)’ 창설이 5월 6일 발효되면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 시리아 북부 이дли브 지역은 터키군과 러시아군;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그 외곽 주변은 러시아군과 이란군; 시리아 남부 데라 지역에는 요르단과 미군 병력의 배치; 서부 홈스 주변 지역은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관할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리아 내 현재 1,000여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나, 러시아가 사실상 IS 격퇴를 주도하고 있으며(Cooper 2017), 미국의 쿠르드 지원에 반발하는 터키도 독자행동에 나서고 있고, IS의 테러공격을 당한 이란도 2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사태의 복잡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결국 IS가 이라크에서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라크 내 정치적 위기는 중단기

적으로 지속할 것이다. 시아파 중심의 중앙정부 및 쿠르드 자치정부와 더불어 수니파가 온건 및 강경으로 나뉘는 3.5등분 형국으로 더욱 복잡한 정치지형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이라크 3등분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었으며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니파도 IS지지 강경 세력 혹은 지역 그리고 이라크 정부에 협력하는 온건세력으로 분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수니파 부족 세력 혹은 민병대가 IS 격퇴작전에 참여하면서 수니파 내부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도권 싸움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라크 안정화에 있어서 수니파 내부의 갈등도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리아의 분열상은 더욱 심각하다.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와 다양한 외부세력의 개입은 향후 시리아의 정치적 통합 및 안정화에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시리아의 현 상황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소수파의 중앙정부와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IS 및 알-카에다 연계 수니파 반군 세력이 대립하고 있어, 친미 소수파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와 최대부족 파슈툰(Pashutun)이 주도하는 탈레반이 대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 하에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국토 전체에 물리적 통제권도 갖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중앙정부가 정통성을 결여하고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처럼 다양한 무장 세력이 준동할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IS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시리아 내에서도 쿠르드노동자당(PKK)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쿠르드 인민보호대(YPG)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국가 통합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의 양대 축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시리아를 둘러싼 중동의 양대 축 이란과 터키가 시리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냉전 시대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에서도 YPG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이 최근 급부상하면서 터키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민병대가 활동하면서 IS 격퇴 후에도 시리아 안정화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Al Jazeera 2017). 결국 아사드 정권, 러시아, 미국, 이란, 터키, 쿠르드,

그리고 수니파 반군 혹은 테러세력과 같이 크게 7대 세력이 시리아의 향후 정치 미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어 시리아의 안정은 요원할 것이다.

3. 러시아와 시아파 vs. 미국과 수니파 구도 부상

미진한 국민국가형성과 부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부상의 대표적인 사례인 아프가니스탄의 모델이 중동 역내 시리아 및 이라크에 등장하면서 중동은 지속적으로 불안정과 테러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미국의 ‘동시개입’이라는 점에서 시리아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여기에 터키, 이란, 그리고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의 패권적 그리고 종파적 이해도 연계되어 아프가니스탄보다 더욱 사태해결이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 들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발호와 격퇴작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종파 간 갈등의 확산이다. 특히, IS 격퇴 작전을 거치면서 중동 내 수니파와 시아파 종파 간 갈등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은 향후 중동의 정치 역학 및 국가 간 쌍방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시아파와 수니파 간 ‘경쟁 및 갈등 구도’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시아파 중앙정부 출범과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등장하였으나, 종파 간 ‘충돌 구도’의 기폭제는 IS 부상과 격퇴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IS 급부상의 기저에는 시아파 중앙정부 부상 이후 이라크 내 수니파에 대한 차별, 배제, 그리고 억압이었으며, 이로 인한 종파 간 반감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후 IS는 투쟁의 명분과 존립의 선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아파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라크 정부를 이란의 꼭두각시인 사파비(Safavid: 1501년 현재의 이란에서 등장한 왕조로 최초로 시아파를 국교로 삼았음)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종파 간 물리적 충돌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이 시리아 및 이라크 정부의 IS 격퇴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약 1,500년 이슬람 역사에서 최대 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 동안 IS 잔당 혹은 지지 세력의 시리아 및 이라크 중앙정부 공격은 종파갈등의 수사학으로 묘사될 것이어서 오랜 기간 양 종파 간 분쟁의 이념적 그리고 역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S 격퇴에 있어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이란이 반수니파 군사행동을 공식화함으로써

써 비국가적세력인 IS의 종파적 공격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파적 군사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6월 20일 “우리가 미사일 목표 지역을 설정했다면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혁명수비대의 공식적인 군사행동임을 강조하였다(Moshtaghlan 2017).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이란이 그동안 고문단 및 민병대 파견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수행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29년 만에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한 것은 향후 중동 지역 내 이란의 군사적 개입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격퇴 명분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연결하는 시아파 초승달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천명함으로써 사우디를 축으로 하는 아랍-수니파 국가와의 대립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Fisher, 2016).

종파 간의 갈등 확대와 더불어 IS 격퇴를 둘러싼 강대국 러시아가 중동 지역 재개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경쟁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2015년 9월 러시아의 본격적 군사개입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유지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영향력 상쇄하는 러시아의 대중동 전략 재가동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이어 2017년 3월 리비아 접경 이집트 서부 시디 바라니 공군기지에 22명 규모의 소규모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리비아 동부 토브루크 임시정부의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는 등 중동 내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3월 리비아에 2-3기의 Mig-23 전투기를 제공했으며 뱅가지에서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북아프리카까지 군사적 거점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이집트에서 공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이란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제재 해제 이후 이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이집트, 삼 지역의 시리아, 그리고 이란 3방향으로 전방위적 중동 내 역할 확대를 대(大)러시아(Greater Russia) 전략을 정치군사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시리아 내 IS 격퇴작전을 통해 러시아-터키-이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을

축으로 하는 기존 중동의 패권벨트에 병립하는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Goldenberg&Smith, 2017).

4. 對카타르 집단단교 조치와 정권 생존

종파 간의 갈등 확산과 신(新)냉전 구도 형성의 기저에는 이란의 부상 및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생존이라는 두 변수가 깔려있다. 이 두 변수의 작용으로 역내 정치 불안 정 그리고 수니파 중동 국가 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타르에 대한 집단 외교적 보복조치다. 반(反)카타르 4개국(Anti-Qatar Quartet)사우디, UAE, 바레인, 그리고 이집트는 카타르에 대한 단교의 표면적 이유로 ‘이란과의 협력’과 ‘테러리즘·극단주의 지원’을 내세웠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란-사우디 대결구도는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Naheem 2017, 2-3).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양국은 같은 종파 소속 정치세력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종파 간의 갈등을 이용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을 이용해 수니파 아랍국가의 수장 역할을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동남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카타르가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어왔다. 따라서 사우디 주도 수니파 국가는 카타르 ‘길들이기’에 나섰다. ‘적성국’ 이란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포기하고 사우디 중심의 패권에 재편입하라는 압박이다. 주요 수니파 아랍 국가들에서는 자국 내 정치적 도전을 종파 갈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명분으로 종파갈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향후 종파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변수는 수니파 아랍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문제다. 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주요 수니파 국가들에게 카타르가 ‘눈엣가시’가 된 이유에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카타르의 개방 및 온건주의 노선이 주요 수니파 권위주의 정권에 불편한 역내 정치 환경을 조성해 왔다. 카타르에 주도적으로 단교 및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국가들로 자국 내 여러 도전의 배후를 카타르로 지목하고 있다. 명분은 카타르의 이란과의 온건한 관계 그리고 테러세력 지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국 내 반정부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보족 조치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사우디, UAE, 이집트 그리고 바레인 정부는 카타르의 내정 간섭을 단교의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다. 카타르는 사우디, 이집트 등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무슬림형제단에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리비아에서도 두 국가와는 달리 동부 토브루크(Tobruk) 정부를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다.

반(反)카타르 4개국이 6월 22일 제시한 13개 외교관계 복원 요구사항을 보면 카타르-이란 관계보다는 자국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13개 요구사항 중 첫 번째 사안만이 이란과의 협력 및 관계 축소를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사안은 카타르의 테러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동 내 반정부 이슬람조직을 테러단체로 지목하고 관련자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룬다. 더불어 카타르가 테러 지원을 통해 주변국에 끼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집트의 군사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터키의 카타르 주둔 병력과 군 기지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Alghussein&Stacy 2017).

카타르의 내정 간섭으로 반(反)카타르 4개국이 가장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는 사안은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 태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와의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알-자지라 방송의 송출 중단은 물론 알-자지라 방송 남용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 바레인 그리고 UAE는 2014년 3월에도 카타르의 무슬림형제단 지지에 반발해 7개월가량 카타르 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Amini and Akbarsefat 2016, 132). 2013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정부도 알-자지라 방송이 자국 내 여론을 선동한다면서 이번 단교 조치 이전에 이미 방송의 지국을 폐쇄하고, 기자와 직원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장기화할 중동의 충돌 구도와 우리의 생존 전략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수니파 주요국의 수니파 국가 카타르에 대한 외교적 및 경제적 봉쇄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향후 중동의 불안정 및 분열을 가속화할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시아파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

황에서 수니파 내부의 갈등 발생은 향후 중동 정치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걸프협력회의(GCC) 내부에서도 오만이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결속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인구의 40% 이상인 쿠웨이트도 이번 단교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GCC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중동 주요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해 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카타르 사태를 계기로 특히 GCC 6개국 간의 긴장과 연대감 약화 혹은 분열의 분위기가 짙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이익과 정권 생존을 위한 정체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결속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치적 혹은 종파적 정체성이 다른 GCC 국가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GCC 내 사우디의 영향력이 주로 UAE와 바레인에 한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3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종파적 여론 그리고 경제적 이해에 따라 사우디 주도의 결속에서 이격하는 상황이다. 만약 사우디가 카타르의 GCC 혹은 아랍연맹 퇴출을 추진한다면 기구의 분열은 현실화하고, 이란과 사우디 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 오만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GCC의 설립배경이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인한 걸프 아랍 왕정의 공동 위협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미 오만과 카타르가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GCC 설립 명분을 약화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사우디가 주도하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39개국의 반테러 동맹군(IMAFT)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우디는 최근 사태로 인해 카타르의 회원 자격 박탈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관련 선언은 중동의 불안정성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예루살렘을 둘러싼 문제이지만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유가는 물론 북핵문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동의 불안정은 유가상승을 가져온다.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저유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중동 내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랍인과 무슬림은 대체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을 부러워하고 배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K-Pop, 화장품, 음식 등도 진출하면서 한류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과 가까운 나라로 분류된다.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과격 세력도 한국을 빼놓지 않고 공격 대상 명단에 올려놓았다.

최근 사태로 중동 내 반미감정이 고조되면서 우리 여행자와 주재원이 공격받을 수 있다.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여행 제한, 교민 소개 등의 조치를 제 때에 취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안전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로 중재자 혹은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강국으로서 국제분쟁에 공정하게 개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비난이 거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지도력과 중재 역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2월 15일 튀니지에서 대규모 반미시위가 있었다. 시위대의 일부가 김정은의 사진을 들고 행진을 했다.

정권생존을 위한 중동 각국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종파 갈등 속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민감한 중동의 정치역학에 대한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사태에서 보이듯이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역할, 이란의 부상, 테러 위협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내 외교 및 정치역학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중동 역내에서 세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파, 진영, 갈등 구도 등에 있어서 우리는 당분간 정무적으로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필요시에는 평화적인 해법을 지지하는 본원적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외교 및 경제 협력에 있어 과거보다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중동이나 아랍이 아닌 국가별 진출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혹은 경제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등 정확한 포지셔닝(positioning)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bstract

Rapidly Changing Middle Eastern Political Dynamics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Jeongmin Seo

Political dynamics in the Middle East is rapidly changing into more complexity. Although the Islamic state (IS), which was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is actually ending, confusion and conflicts in the region are increasing. In addition, the Middle East is getting caught up in new conflicts as various external forces have intervened in the crisis in Syria and Iraq. As a result, the Middle East is divided into the two main axes of the Sunni belt led by Saudi Arabi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hia belt dominated by Iran and Russia in the form of a new Cold War in the region.

This article attempted to approach the rapidly changing intra-regional sectarian conflicts and the new cold war formation with the two variables: the return of Iran as a regional variable and the regime survival of each authoritarian state as a domestic variable. Thus, this study explains the hypothesis that the imminent tasks in containing Iranian influence and perpetuating regime survival have brought about the spread of sectarian conflicts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 War system in the Middle East. These two variable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urrent regional political phenomena and dynamics.

Our governments and businesses need to re-establish a cautious and sophisticated approach to sensitive political Middle East dynamics. As shown in the Qatar situation, Middle Eastern countries have diverse perspectives and policies on key issues such as the role of the US and Russia in the region, the rise of Iran, and the threat of terrorism, which have complicated their domestic politics and external diplomacy. In the midst of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dynamics in the Middle East, we need to maintain a neutral position for the time being, and to support the peaceful solution if necessary. Furthermore, precise positioning of our policies is required with each of Middle Eastern countries while closely examining possible conflicts of diplomatic or economic interests among them.

참고문헌

- Alghussein, Bassima and Stacey, Jeffrey A. (2017). "How Saudi Arabia Botched Its Campaign Against Qatar." *Foreign Affairs* (12 July). (검색일: 2017.12.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middle-east/2017-07-12/how-saudi-ara-bia-botched-its-campaign-against-qatar>.
- Amini, Ansar, and Akbarsefat, Mehdi. (2016). "Qatar's Modern Diplomacy and Al-Jazeera's Role in Middle East's Evolutions over the Recent Decades." *Journal of Sociological Research* 7(1): 123-137.
- Chulov, Martin. (2017). "Kurds See Chance to Advance Their Cause in Ruins of Islamic State." *The Guardian* (24 June) (검색일: 2017. 12. 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n/24/kurds-see-historic-chance-advance-cause-ruins-islamic-state>
- Cooper, Helene.(2017). "Critics Say U.S. Is 'Sleepwalking' Into Wider Role in Syria." *New York Times* (22 June). (검색일: 2017.12.25.)
<https://www.nytimes.com/2017/06/22/world/middleeast/united-states-syria-military-pentagon.html?mcubz=3>
- Fisher, Max. (2016). "The Cold War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that's tearing apart the Middle East." *Vox.com* 4.
- Gause, F. Gregory. (2017). "Ideologies, Alignments, and Underbalancing in the New Middle East Cold Wa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0 (3): 672-675.
- Goldenberg, Ilan and Smith, Julianne. (2017) "US Russia Competition in the Middle East Is Back." *Foreign Policy* (7 March). (검색일: 2017.12.24.)
<http://foreignpolicy.com/2017/03/07/u-s-russia-competition-in-the-middle-east-is-back/>
- Moshtaghlani, Artemis. (2017) "Iran Launches Missiles into Eastern Syria, Targets ISIS." *CNN* (19 June). (검색일: 2017.12.20.)
<http://edition.cnn.com/2017/06/18/middleeast/iran-launches-missiles-into-syria/index.html>
- Naheem, Mohammed Ahmad. (2017). "The Dramatic Rift and Crisis between Qatar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of June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Disclosure and Governance*: 1-13.

“Iraq parliament Passes Law Legalizing PMF Shia militias.” *Middle East Monitor* (26 November 2017). (검색일: 2017.12.19.).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161126-iraq-parliament-passes-law-legalizing-pmf-shia-militias/>

“The Rise and Fall of ISIL Explained.” *Al Jazeera* (20 June 2017). (검색일: 2017.12.17.)

<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7/06/rise-fall-isil-explained-170607085701484.html>

이슬람 경제란 무엇인가

손성현*, 장윤희**

1. 서론

이슬람은 ‘복종’ 그리고 무슬림은 ‘따르는 자’, 즉,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종교이며 삶의 양식이자 문화이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이슬람에 기초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다양한 부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이슬람 경제(Islamic economy)’라고 한다.*** 이 글은 할랄 식품뿐만 아니라 이슬람 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할랄 인증의 의미와 주요 이슈

1) 할랄과 하람

무슬림은 실정법과 함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길’ 또는 ‘도리’라는 의미로 인간이 지켜야 하는 행동을 규정한다. 샤리아는 일반적으로 이슬람 율법(Islamic law)으로 번역되나 단순히 율법이라기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규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샤리아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이슬람의 성서인 꾸란(Quran)과 무함마드의 언행(Sunna)을 기록한 하디스(Hadith), 이슬람 법학자들 간 견해의 일치(합의)인 이즈마(Ijma),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한 유추인 끼야스(Qiyas)와 같이 4개의 원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꾸란이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원천이며, 이즈

* 現 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 現 KIEP 아중동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 이슬람 경제는 학자에 따라 ‘할랄 산업’ 또는 ‘이슬람 산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와 끼야스는 법학자 간, 학파 간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샤리아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의무, 권장, 중립, 비난받지만 금지할 수 없는 행위, 금지된 행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람(Haram)’이라고 한다. 반면 할랄(Halal)은 알라(Allah, the God)를 경배하기 위해 신체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용된 것’을 뜻한다. 즉, 넓은 의미에서 이슬람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샤리아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할랄 인증

샤리아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을 파트와(Fatwa)라고 한다. 파트와는 이슬람 율법학자가 어떤 사안이 샤리아에 부합하는지를 해석하는 권위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파트와는 구속력을 가진 판결이 되지만 샤리아를 기본법으로 하지 않는 국가 대부분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종교적 답변에 불과하다. 반면 이슬람 경제에서 ‘파트와’ 혹은 ‘할랄 인증’은 상품 및 서비스가 샤리아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서는 금융 기관 내 샤리아 위원회 혹은 외부 샤리아 컨설팅 기업을 통해 파트와가 발급되며 할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관련 기업은 할랄 인증 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할랄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샤리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하람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의 유일신인 알라만이 정하는 것으로 무슬림은 할랄과 하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할랄에 대한 판단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이슬람 종파, 국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할랄 인증 및 파트와는 단순히 이슬람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슬람 금융의 경우 상품 및 투자 대상이 전통 금융기관(비이슬람 은행, 투자 기업, 보

* 할랄은 크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예배, 단식, 성지순례), 하도록 권장되는 것(자발적 예배, 단식 등), 법과 무관한 행위(TV 시청, 외식 등)로 구분되기도 한다.

** 이슬람 금융에서는 일반적인 금융 자금과 이슬람 금융 자금이 분리되어야 하며, 할랄 식품 및 화장품 등에서는 돼지고기, 샤리아에 의해 도축되지 않은 육류 등의 하람과 할랄 제품이 제조 및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험사), 주류, 돼지고기, 엔터테인먼트(카지노, 영화, 음악, 호텔), 담배, 무기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과 함께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비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투자 비중, 매출채권 비중 등의 재무적 안전성 또한 판단 범위에 포함하여 투기적 거래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할랄 식품의 경우 고기류는 다비하(Dhabiha)라고 하는 이슬람식 도축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분뇨, 시체, 혈액, 개, 돼지, 알코올 등 샤리아에서 ‘불결’한 것을 가리키는 나지스(Najis)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호르몬, 유전자변형 제품, 각종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좋은’이라는 의미의 ‘타입(Tayyib)’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3) 할랄 인증 관련 이슈

할랄 인증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국가 및 학파마다 다른 기준, 인증에 따른 비용 상승, 인증 취소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샤리아 리스크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파트와나 할랄 인증은 대부분 민간 기관을 통해 발급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그리고 학파마다 인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바다 생물을 예로 들면, 한발리, 샤피이 학파는 모든 어패류를 섭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말리키 학파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금지하지만, 게, 조개, 오징어는 허용한다.* 시아파의 경우 새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할랄로 간주한다. 물론 최근 이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이전보다 보편화되고 통일성을 갖추어가고 있지만, 종파 혹은 학파 간 이견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 및 진출하려는 국가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서 공인한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때로는 특정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이 자국에서 공신력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타국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적용되는 할랄 인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금융의 경우에도 이슬람 법학자 혹은 학파별 해석의 차이에 따라 특정 이슬람 금융 상품이 샤리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법학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및 금융 기관이 이슬람 금융 상품

* 이슬람은 무함마드 사후 모든 칼리파를 이슬람의 계승자로 인정하는 순니파와 무함마드의 혈족만을 칼리파로 인정하는 시아파로 나뉜다. 그리고 순니는 다시 샤리아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이성을 존중하고 관습을 중요시하는 하나피, 칼리프의 가르침과 개인의 율법 해석을 존중하는 샤피이, 샤리아를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한발리, 하디스를 중요시하는 말리키 학파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시아파도 다섯 이맘파인 자이디, 일곱 이맘파인 이스마일, 열두 이맘파인 자파리 학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나 할랄 제품을 내놓기 위해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이른바 ‘파트와 쇼핑’ 혹은 ‘할랄 인증 쇼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증서의 과다 발급은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인증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샤리아 리스크로, 이는 상품 및 서비스가 샤리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UAE의 에너지 기업인 다나 가스(Dana Gas)는 2013년 7억 달러 규모의 수쿱(Sukuk,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샤리아 위원회로부터 발행된 수쿱이 이슬람에 적합하다는 파트와도 당연히 발급받았다. 하지만 UAE 에미리트 중 하나인 샤르자(Sharjah) 법원은 2017년 6월 해당 수쿱이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샤리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Sharif, 2017). 또한 이슬람 금융의 경우 실정법과 샤리아 해석이 대치되는 경우 이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3. 이슬람 경제의 성장 배경과 주요 분야별 동향

1) 이슬람 경제의 성장 배경

그렇다면 무슬림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슬람 경제는 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무슬림 인구 증가와 이들의 구매력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무슬림 인구가 2010년 기준 약 1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3%였으며, 2050년에는 2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특히 2007년~2016년 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은 상위 20개 국가 중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에 속한 국가들이 15개에 이를 정도로 무슬림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World Bank, Data, Population growth). 또한 OIC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국가에서 사

* 모든 무슬림이 이슬람 금융이나 할랄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금융이 발달한 GCC 국가들의 경우에도 은행 자산 기준 이슬람 은행 비중은 2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회적 제약이 많았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선, 화장품 관련 소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이민을 통한 비이슬람 사회로의 무슬림 진출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고유가로 인해 중동 지역 산유국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획득하였고 구매력도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문화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무슬림이 소비의 영역에서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및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엄익란, 2013). 또한 유럽, 북미 등의 지역에서 이민을 통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술, 돼지고기 등이 포함되거나 관련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무슬림은 샤리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섭취하는 것이 할랄인지 알아야만 했고 이에 따라 할랄 인증의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및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 할랄 인증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식 도축법을 따르지 않는 육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UAE는 국가 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할랄 인증이 단순히 종교적 측면 외에도 식품, 금융 등과 관련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엄익란(2013), p. 47). 그리고 네슬레, P&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할랄 제품 생산을 통해 해당 기업이 이슬람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는 현지에서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 금융

이슬람 금융 시장은 이슬람 경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톰슨 로이터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보고서(2017)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이슬람 금융 시장 규모는 2조 2,020억 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3조, 7,82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17).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따라 이자 수취,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 술, 도박, 포르노,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회사, 상품 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손익 공유, 실물 기반 거래와 같은 이슬람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다. 2000년대 이

후에는 유가 상승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들과 정부 정책 지원 및 중동 지역 자금 유입에 힘입은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이슬람 금융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국제 유가는 중동 산유국의 성장률을 둔화시켰으며, 이는 이슬람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금융 산업의 위축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저 유가는 또 다른 면에서 이슬람 금융이 성장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들은 그동안 수쿱을 발행할 동인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이들의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 발행 수쿱의 규모 확대로 연결되었다. 또한 성장 둔화, 수익률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레인의 알 바라카 은행(Al Baraka)과 파키스탄의 부르즈 은행(Burj Bank), 아부다비 국민은행(Abu Dhabi National Bank)과 퍼스트 걸프 은행(First Gulf Bank) 등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슬람 은행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의 성장을 위해 중동의 국부펀드, 사모펀드 등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UAE는 세계 최초로 이슬람 무역 금융 관련 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등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 기관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핀테크, 디지털 뱅크 관련 기술도 도입하여 제도 및 기술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3) 식품

할랄 식품은 이슬람 금융 다음으로 이슬람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 2,450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9,300억 달러로 연평균 7.6%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17). 할랄 식품에는 알코올, 시체, 혈액, 개, 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닭, 소, 양과 같이 이슬람에서 허용한 동물을 이슬람식 도축법을 통해 죽인 것만을 할랄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식품 품질과 관련된 기본적인 국제 표준을 준수하면서 화학첨가물, 위생 조건 등도 강조하고 있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비무슬림의 할랄 식품에 대한 구매 의사도 증

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식음료 기업과 국부펀드 등의 할랄 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도 산업 성장을 돕고 있다.

할랄 식품의 소비는 무슬림이 하고 있지만 밸류 체인 상의 생산, 가공, 유통은 비무슬림 기업 및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미국, 브라질 등 비무슬림 권에서 대규모 재료 조달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네슬레, 다농, 맥도날드 등의 글로벌 기업이 제조 및 가공하고 테스코, 까르푸 등이 유통 및 판매한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 비무슬림 국가에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소위 무슬림 ‘밀레니얼 세대’의 외식 문화 발달은 할랄 식품, 음식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식품 생산, 유통, 물류 등의 연관 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할랄 음식점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활동도 젊은 세대의 할랄 음식점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소셜미디어에서 할랄 음식점에 대해 언급한 이들의 글 중 83%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Reuters, 2017).

4) 의약품 및 화장품

할랄 의약품 및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식품 외에 무슬림이 섭취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제품(각종 약물, 보습제, 샴푸, 데오드란트, 매니큐어 등)에 돼지 부산물, 알코올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할랄 의약품 및 화장품은 개, 돼지 등의 동물 및 부산물(지방, 젤라틴, 콜라겐, 글리세린, 알란토인 등)과 여기서 추출된 효소, 트립신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독성이 포함된 물질, 유전자조작(GMO) 동식물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할랄 의약품과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각각 830억 달러, 570억 달러였다. 톰슨 로이터는 2022년 기준 할랄 의약품은 1,320억 달러, 화장품은 82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uters, 2017). 최근 OIC 국가들이 할랄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등록 간소화 및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할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마련의 어려움, 보톡스와 같은 독성물질의 할랄 인증에 대한 논란, 백신과 같은 의약품에서 돼지 등의 동물성 재료의 완전한 대체 어려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5) 기타

패션, 관광, 미디어 및 여가 등의 분야에도 할랄 제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의 규모는 할랄 의약품 및 화장품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할랄 패션 시장 규모는 2,540억 달러, 관광은 1,690억 달러, 미디어 및 여가는 1,98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2022년 패션은 3,730억 달러, 관광은 2,830억 달러, 미디어 및 여가는 2,8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17). 특히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히잡(hijab)뿐만 아니라 스포츠 웨어, 수영복(부르키니) 등으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슬림 여성들의 소득 수준과 함께 경제적 자율성도 높아지면서 여성 관련 할랄 패션 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무슬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랄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이슬람 관광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할랄 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할랄 관광은 할랄 음식점, 호텔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을 활용한 할랄 여행자 보험, 할랄 여행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랄 미디어는 무슬림이 시청할 수 있는 선정적이지 않고 이슬람 문화, 사상 및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송, 소셜 미디어, 도서, 온라인 콘텐츠 등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인 알케미야(Alchemiya)에는 무슬림과 관련된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만을 모아 놓은 채널이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을 무슬림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전체 사용자의 10% 이상이 비무슬림이며, 앞으로 그 비중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17). 이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TV 시리즈로 방영된 부르카 어벤저스(Burka Avengers)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무슬림 어린이들이 서구의 만화가 아닌 이슬람 사상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쉽게 받아드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할랄 미디어 콘텐츠가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플랫폼의 발전을 통해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사점

향후 무슬림 인구 증가 외에도 중동 지역의 산업다각화, 아시아 지역 OIC 국가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 이슬람 경제는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민간 부문 및 비석유 부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산업으로서의 이슬람을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GCC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이슬람 금융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소득 수준 향상, 이슬람에 대한 정체성 강화 추세는 할랄 상품 소비 증대뿐만 아니라 할랄 식품 가공 등의 제조업 분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높은 경제성장 및 인구 급증으로 최근 할랄 상품 최대 소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의복, 의약품에도 할랄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도 강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슬람 경제 혹은 산업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금융,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과 관련해 수출 및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할랄 인증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저유가 시대에 중동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석유를 수입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나가야만 한다.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중요도 또한 커지고 있어 현지 진출을 확대할 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랄 인증이 곧 현지 수출 및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지만,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파트와는 이슬람 금융 상품 개발 시, 할랄 인증은 최초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지역 및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할랄 인증 획득 이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되어 소송에 휘말리거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What is Islamic Economy?

Son Sunghyun, Jang Yunhee

Islam means obedience and Muslim indicates people who obey the teaching of Allah(the God). Muslims live in accordance with Islamic law(Sharia) defining permissible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their body to worship Allah. Islamic law has been applied not only to food but also to a wide range of field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slamic economy which is abou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Muslims can use. The Islamic economy has been growing considerably with increasing Muslim populations and their improvement of purchasing power, Muslim penetration through immigration in non-Muslim societies, the marketing of global enterprises and trade protectionism. Also, non-Muslims' interest in Halal products has been growing as they start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products are not just following Islamic law but also pursuing safe and healthy life.

The Islamic finance is the largest sector in the Islamic economy. The value of Islamic financial market recorded 2.22 trillion USD in 2016,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3.82 trillion USD in 2022. Growth of Islamic finance sector has been slowed with recent lower oil prices. However, it still has bright aspects such as increasing issuance of Sukuk(Islamic bond) and the emergence of global Islamic banks through M&A. Halal food is the second largest sector after Islamic finance, and its growth will be driven by rising investments of sovereign wealth funds in Halal food companies, as well as increasing preference of young Muslims for Halal restaurants. Even though market values are not yet very large, Halal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sectors are on the rise as awareness of Haram(non-Halal) substances in non-food ingestion is growing. However, there are still critical issues, such as difficulties in replacing the existing Haram

materials and financing R&D costs. Halal products and services also exist in fashion, tourism, media and leisure industry, and their size is larger than those of Halal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In the future, the Islamic economy is expected to maintain a strong growth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Muslim populations, industrial diversification policies of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the rising incomes of Asian Muslim nations. Halal certific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as they are trying to advance into Muslim countries. However, they should consider different Halal certification criteria per each country and school, costs associated with the certification and Sharia risks about cancellation or invalidity of the certifica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 배경과 전망

유광호*, 손성현**

1. 서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기준 세계 석유매장량의 15.6%, 생산량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으로 석유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해 유가의 등락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경제 및 정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한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새로이 왕세자로 임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과 같은 장기 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방위적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경제다각화 추진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특유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경제개혁 방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구조적 특징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총수출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4.2%를

* 現 KIEP 아중동팀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 現 KIEP 아중동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기록하였고, 정부 재정수입의 석유 의존도 역시 같은 해 기준 72.5%에 달했다(SAMA, 2016).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이 석유 시장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 수출액의 감소는 외화보유액 및 재정수지 악화, 경기 둔화 등 심각한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개발 계획도 재정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이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하여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이권형 외., 2016).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전반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38.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동은 물론 아시아, 남미 등 다른 신흥 지역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IMF, 2017). 국내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정부가 이권을 독점하고 있는 석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석유 산업 이외에는 뚜렷한 생산 기반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주로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즉 정부는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보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이다(박복영, 2004). 이와 같이 정부의 경제적 비중이 큰 국가는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민간 부문 고용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자국민 고용은 공공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취업자 중 민간 부문 종사자는 총 1,076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83.2%인 895만 명, 자국민은 16.8%인 181만 명으로 나타났다(SAMA, 2016). 이는 공공 부문에서 자국민이 94.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국민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임금이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훨씬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우디아라

비아 현지로 유입된 시기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7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저임금 및 육체노동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자국민 고용이 공공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자국민의 높은 선호는 급격한 인구 증가 등의 요인과 맞물려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자국민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증가율은 1995년(1,873만 명)부터 2015년(3,155만 명)까지 20년간 연평균 2.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인구증가율 1.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The World Bank).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가 앞서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 실업률은 12.3%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 실업률은 34.5%에 달했다(SAMA, 2016).

3. 경제 개발 계획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유가 변동에 의해 국내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석유 산업에 치중된 경제구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개혁의 핵심 방향은 석유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 동안은 국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동반한 산업다각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더불어 2005년에는 자국민의 완전고용, 양질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Long-Term Strategy for Saudi Economy)'을 발표하였다.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발표된 제8차, 9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이에 대한 단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 및 수출품목 다변화, 민간부문 확대, 지역경제 균형 개발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홍미정 외, 2013).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니타카트(Nitaqat), 하피즈(Hafiz)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만성적인 실업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업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정권 교체를 초래하는 주변국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손성현, 2016). 니타카트 제도는 1990년대부터 실행하고 있던 사우디제이션(Saudisization), 즉 자국민 우선고용 제도를 강화, 발전시킨 정책이다. 자국민 고용 비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하피즈 제도는 구직 중인 자국민에게 매달 2,000리얄(533달러)의 보조금을 1년간 지급하는 정책인데, 실업자 외에 장애인, 여성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한바란 외., 2012).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1년과 2012년에 단기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공공 부문 임금 인상, 실업수당 지원 등에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활성화, 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부문 의존도와 자국민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유가 기조로 인해 경제위기가 지속되었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혁 추진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나, 200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기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 의지가 다소 약해진 측면이 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국가 장단기 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계획을 제도화 및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미진한 면이 있었다(한바란 외., 2012).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추진되었던 고용 관련 정책도 국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격앙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과도한 석유 부문 의존도로 인한 경제적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4. 무함마드 빈 살만의 경제·사회 개혁 정책

2015년 4월 부왕세자 겸 경제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6년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비석유 부문을 육성하고 경제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 석유 중심 경제로부터의 탈피가 핵심 내용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라는 3대 영역을 설정하고 각 부문에 대한 세부 영역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기회 확대, 국영 기업 및 정부 서비스 민영화, 석유 및 가스 부문 등 전략산업 자국화, 사업환경 개선, 물류 인프라 및 선진 정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손성현, 2016).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실업률을 2030년까지 7%로 낮추고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는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비석유 부문 수익을 2020년에 5,300억 리얄(약 1,413억 달러), 2030년에는 1조 리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DP 대비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은 2030년까지 16%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 규모를 7조 리얄(약 1.9조 달러)로 늘리고 민간 부문의 GDP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65%로, FDI 비중을 3.8%에서 5.7%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대규모 개혁 프로젝트를 국가변혁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및 재정균형프로그램(FBP: Fiscal Balance Program)과 국부펀드인 PIF의 금융지원을 통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7년 6월 왕세자로 올라선 뒤 개혁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10월 리야드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회의에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종교와 전 세계에 개방된 온건 이슬람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EIU, 2017).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네옴(NEOM)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네옴 신도시는 5,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위한 홍보영상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첨단도시와 같이 지금까지의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른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탈석유 시대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프로젝트가 에너지, 생명공학, 오락·관광업, 첨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및 산업다각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rab News).

특히 관광 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네옴 프로젝트 이전에도 관련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2017년 8월 무함마드 왕세자는 홍해 연안 50여 개 섬을 고급 리조트로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호텔 및 관광 기업 유치로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3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rab News, 2017).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의 발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부문으로 관광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고용될 수 있는 부문이 제한된 가운데 관광 부문이 여성의 노동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호텔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우디 여성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Arab News, 2018). 관광 부문 개발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종교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관광 비자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끄는 사회적 변화도 눈에 띈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그동안 금지되었던 여성의 운전 허용이 결정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허용 예정) 경기장 입장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추진하는 사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수했던 보수주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여성의 운전 허용을 개혁의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화관, 콘서트 등의 허용은 문화적 자유를 인정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우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무함마드 왕세자의 정책 추진을 지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전망 및 과제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유가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석유 부문 수입 감소, 재정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추진된 산업다각화 정책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의지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방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으로, 기존과 같이 정부재정 확대가 아닌 공공부문 효율화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특히 여성으로부터의 사회 개혁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에 대한 이행 의지와 추진력은 이전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이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

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공공 부문 지출 감축, 민간 부문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이 비대한 상황에서 사우디인 노동자의 민간 부문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노동생산성과 근로의식이 낮아 인적자원 육성이 힘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일 머니를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복지와 보조금 형태로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유지해 온 사우디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니타카트와 같은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내 강경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온건 이슬람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개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이 미칠 영향도 향후 정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대중동 교역 및 투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협력국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대사우디 수출액은 약 832억 달러로 중동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총수출 중 비중도 14%에 달했다. 2017년 9월까지의 누계 기준 한국의 대중동 투자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44%로 중동 내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 및 투자는 다양화되지 못하고 일부 산업 및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대사우디 수입은 원유와 나프타 등 에너지 관련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대사우디 교역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무역적자는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사우디 투자에서 건설업이 전체 투자의 90%에 달하는 등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는 건설 프로젝트 시황에 따른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유가 하락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내 프로젝트 시장이 침체되면서 한국의 투자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서 언급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협력 관계도 보다 다각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이를 통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확대 부문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력, 관광, 보건의료 등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기업이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진 부문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산업 고도화 및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면서 기술이전,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ackground and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in Saudi Arabia

Kwangho Ryou, Sunghyun Son

The economy of Saudi Arabia is highly sensitive to fluctuation of oil market and this leads to macro-economic instability and economic stagnation whenever oil prices drop sharply. This phenomenon is mainly because of the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of its own economic structure — the over-dependence of its economy on the oil industry and excessiv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domestic economy. Moreover, Saudi nationals' preferences for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have brought chronically high unemployment rates.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has been striving to reform its economic system by nurturing its strategic industries and invigorating private sector. During the 2000s, whe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government was relatively stable because of high oil prices, the reform policies primarily focused on diversifying its economy. In 2010s, on the other hand, when citizens of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region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against their worsening economic situations, the government has struggled to boost employment especially for its nationals.

However, despite of the long-term process of its economic reform, Saudi Arabia remains heavily reliant —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 on revenues from oil, and still has high unemployment rates. Moreover, due to the recent oil prices drop, Saudi Arabia is facing with economic recession. For this reason, under the lead of Mohammad bin Salman bin Abdulaziz Al-Saud who is the crown prince of the kingdom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showing a new movement for solving fundamental problems of its economy.

Mohammad bin Salman also known as MBS was appointed as deputy crown prince and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in April 2015. In 2016, MBS announced 'Saudi Vision 2030', a long-term plan to reduce the economy's reliance on oil sector, diversify its economy and lead to economic transformation.

Social change led by MBS, who was promoted to crown prince as of June 2017, also have been spreading. Saudi Arabia eased restrictions on women driving and allowed women to enter a sports stadium for the first time in 2017. Such movements are considered the first step toward social reform propelled by MBS and great change from the conservative policies which have remained in the country so far.

With external factors such as lower oil prices, the demands of social change within the country,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and women, are expected to accelerate the pace of Saudi Arabia's reform drive in the future. Vision 2030, which is a comprehensive reform pla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change in Saudi Arabia, is encouraging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plan focuses on public sector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not on expanding the government's finance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raised over the possibility of actual implementation. Goals of Vision 2030 appear rather ideal in consideration of current situation in Saudi Arabia, and the ways to achieve the goals also look unclear.

Despite the challenges, changes in Saudi Arabia are underway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As Saudi Arabia is being transformed, so should be the ways of cooperation Korea pursues with Saudi Arabia, and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diversified from the current economic relations focused on energy and construction.

위기의 이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기연*

1. 들어가며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2위를 차지고 있으며, 원유 확인 매장량은 세계 4번째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중동의 강국이다. 또한 이란은 8000만 명 넘는 인구를 보유한 대국으로, 한국에 있어서도 중동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이란은 중동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핵보유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 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 또한 총 수출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원유가 하락으로 이란은 경제 침체 국면에서 허우적대고 있다(최경주 2017: p185). 2018년 기준 이란의 실업률은 12.1%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실업률 10.2%, 여성 실업률 19.7%로 남녀실업률 격차는 높은 편이다. 젊은이들(15-24세)의 실업률 역시 2018년 6월 기준 28.3%로 지역 평균보다도 높은 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 정세와 경제는 급격한 혼란 속에 있다. 특히 JCPOA(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조건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다자간국제협약=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하 JCPOA)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환율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2018년 8월 기준 1년 사이 이란 리알(Rial)은 172퍼센트 가치 하락하였고, 환율은 1달러당 십만 리알 가량 올랐다. 리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에 따르면, 이란 물가는 2018년 29.6%, 2019년 34.1% 오를 것이라 전망된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

* 現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탄, 파키스탄 평균 물가 상승 전망이 2018년 10.8%, 2019년 10.2%라고 할 때, 이란은 물가 상승률은 지역 평균 상승률을 월등히 상회한다.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권역의 모든 지역에서 실질 GDP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단과 함께 유일하게 실질GDP가 2018년 -1.5%, 2019년 -3.6%로 감소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경제 제재 이후 이란이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KOTRA 2019년 이란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내부는 외환 및 산업재 공급 차질로 환율 폭등 및 제조업 위축, 물가폭등에 따른 민생고증가 등 시장경제 혼란 및 정정불안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이란 내 외국 기업들은 미국과 거래가 많은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비즈니스 활동 중단 및 투자 철수 사례가 증가한 반면, 중국 기업은 지속 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란 경제 제재 이후 큰 기대를 갖고 이란 시장을 점유하고자 했던 한국 진출 기업들은 특히 건설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단·취소된 상황으로,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지 운영 인력 축소를 검토 중이며, 지상사의 경우 원화결제 중단된 상황에서도 제재복원시점까지 관망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결제 중단으로 수출대금 결제 지연 사례가 대거 발생했으며 사실상 이란 신규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란이 맞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생존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이란 주요 경제 지표 및 JCPoA 파기 이후 이란 상황

<표 6-1> 이란 주요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79.4	80.3	81.2	82.0	82.8
명목GDP	393.4	425.4	440.9	408	365.5
1인당 명목GDP	4,955	5,298	5,429	4,976	4,414
실질성장률	-1.3	13.4	3.5	-1.5	-3.6
실업률	11.8	12.4	12.7	12.8	12.6

자료: KOTR 국가별 진출전략: 이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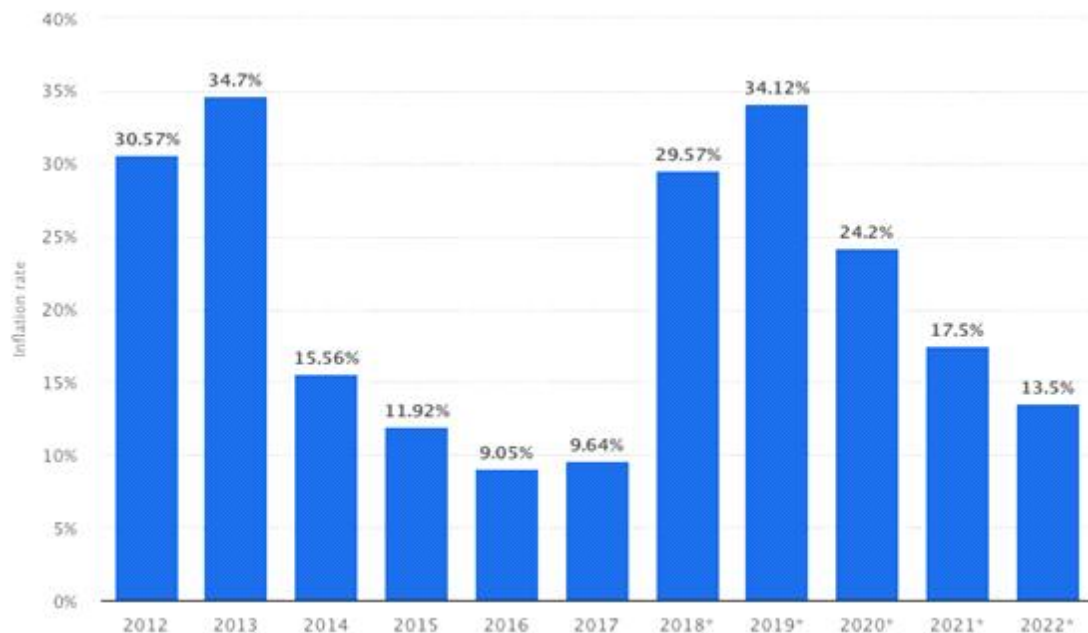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서 현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Maximum Pressure Campaign)’을 펼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

* 2018년은 추정치이고 2019년은 전망치임.

재를 전면 복원하여,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 기관과의 금융 거래는 중단되었다. 미국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연합하여 이란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이란의 힘을 봉쇄시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김일수 2019). 실제로 미국 현 정부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천명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기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고 있다. 이란을 더욱 압박하여 중동에서의 이란의 시아 패권으로서의 종주국으로서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란 제재 이후 잠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란은 트럼프 취임 이후 이란의 JCPOA(공동포괄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폐기시킴으로서 더욱 큰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적 위기가 가해지면서, 2017년 12월 28일 경제난으로 인한 이란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림 6-1> 2012-2022년 인플레이션을 현황 및 예측



자료: IMF 웹사이트

위의 <그림 6-1>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공식 선언한 2018년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9.64% 대비 2018년 29.57%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이에 소비시장은 얼어붙었고, 특히 수입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란 국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길 원했는데...”

10년 만에 경제 제재가 풀리고 시장 개방에 대한 새 희망을 품었던 이란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란 환율 시장은 출렁거렸으며 모처럼 찾아본 경제 훈풍은 사라졌다. 2015년 1월 경제 제재가 풀릴 무렵 1달러에 3만 5천리알쯤이던 환율은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하루 만에 만 리알 넘게 치솟았다. 테헤란을 비롯해 시라즈, 이스파한 등 대도시 환전상들이 들썩었다.

임금 체불이 속출하고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적극 개입해 환율을 조절해야 했다. 2016년 말 미국 상원은 이란 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했다. 이란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워싱턴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테헤란에서는 임시 국회가 소집됐고, 환율이 4만 2천 리알까지 치솟았다. 금값도 동반상승했다. 이란 사람들은 핵 시설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다 내주고 얻은 성과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지난 2018년 5월 8일 2년간의 두려움과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일방적이고 재앙적이며 끔찍한 협상”이라며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중앙일보, 2018).

<그림 6-2> 미국 1달러 당 이란 리알 환율 변화*



달러 대비 이란 리알 가치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30% 가량 하락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 발표 하루 전 6만 5000리알이었던 환율은 다음날 7만 5000리알로 상승하였다. 위의 <표 3>을 보면 2018년 3월 21일 즉 새해 이후 4월, 5월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름을 알

* 이란 실시간 환율 사이트(bonbast.com)을 통해 저자가 직접 작성(기간: 2018.01.01.~ 2019.03.01.)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협정 파기 선언 이후보다 그 이전에 이미 미국 1달러 당 이란 리알 환율의 상승폭이 더욱 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부패한 독재’로 표현하고 “이란이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을 요청 한다 (중앙일보, 2018)”고 언급한 다음날인 2018년 9월 26일에 1달러당 19만 리알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경제 침체 속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어왔던 금화 가격 역시 올라, 이란의 금시장의 가격이 세계 금시장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 한 테헤란 시민에 따르면, 이미 이란 내 달러 환전이 어려워 환전상들은 문을 닫은 실정이며, 암시장에서만 지인들끼리만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자재 인상에 의한 향의의 의미로 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석상들 역시 문을 닫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에 파기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3년 전 힐러리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오늘날의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다는 것이 이란 대중들의 중론이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된 경제제재를 경험해왔던 이란 국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2018년(이란력 1397년) 3월 21일 새해를 맞이하기 전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 미국 달러를 확보하고, 미리 필요한 원자재들을 구입하여 또 다른 경제 위기에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류층들과 해외에서 기반을 잡은 사업가들은 이 경제적 위기에서 오히려 시세 차익을 누리고, 부동산 구입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부유층들은 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통해 더욱 많은 이익을 얻어, 점차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경제 제재와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이란 내 6개 부실 은행들이 부도가 나면서, 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차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비를 이미 일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 넘는 잔금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치솟는 환율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노동자의 날에 보

여진 것처럼 임금이 밀린 노동자들과 직장인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중하층의 임금 노동자들에게 고정되거나 혹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월급에 비해 날로 높아가는 생활비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2017년 12월 말과 2018년 1월초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에 이란 정부는 국내 생산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생필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의 공산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물품 광고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란 시장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외국산 제품들 특히 사치품을 필요한 소비재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폭등과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 부유층들이 있는 반면, 부동산 폭등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이란 내 경제적 고통은 아무리 오랜 시간 무덤덤해졌다고 해도 극복하기에 힘든 상황인 것은 명확하다.

2018년 11월 5일 미국 정부는 제 2차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8월 이란과의 귀금

<표 6-2> 對이란 제재 복원 내용*

1단계 제재조치(2018.8.7. 재개 및 유예 90일)	2단계 제재조치(2018.11.15. 재개 및 유예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 이란 리알화 거래, 이라외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구입, 청약 및 발행 제재 • 이란 금 및 기타 귀금속 교역제재 • 흑연, 원금속, 반가공금속(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산업 ‘공정통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간접 판매, 공급, 이전 제재 • 이란자동차(자동차부품) 부문 제재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 이란산 카펫 및 식음료 수입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 (국영선사(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및 계열사와 거래금지) • 원유 관련 제재 (국영석유회사(NIOC), 국영나프타고역회사(NICO), 국영탱커선사(NITC) 등과의 거래금지) •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전문 금융 메세징 서비스 제공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 이란 에너지부문 제재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 2018 對이란 제재 복원, 중동 주요국 및 기업 반응조사 (디지털 자료)

속 거래 등을 제한하는 1단계 제재를 복원하고 이어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했다. 제 2차 이란제재는 이란 산 원유·가스 등의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 터키에 이어 2차 제재 면제 대상 8개국 안에 포함되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80일 지나면,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한다.

2019년 4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재차 미국 정부에 2019년 5월로 다가온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5개국은 예외국으로 인정받되 허용 수입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KBS News, 2019). 이란 제재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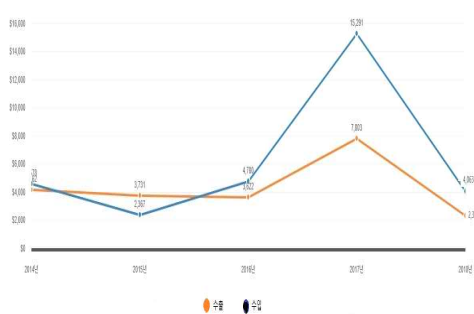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이란 현지 정보 제공자들에 의하면 이란 내부는 ‘저항경제’, ‘자급경제’를 외치며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에 이은 이란 제재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위기를 맞은 이란 경제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국산품 이용하기 운동’, ‘해외여행 자제 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30% 상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내부에서 결속력을 다지자는 애국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영미디어에서는 수입품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공익광고가 연일 방송되고 있다.

2018년 11월 2차 제재 이후 이란 사회 내부에서 큰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잠시라도 이란 내부의 이념적, 정치적 논쟁을 접고 외부 제재에 당당히 맞서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현재 이란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초에 비교해 2018년 말에는 1달러 대비 이란 리알의 가치가 3분의 1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이란 내 경제 위기와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현재 이란의 사회 상황은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에 더불어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란 내 보수-개혁파 갈등과 함께 정치적인지각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과의 무역 교역 현황

이란 내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이란 소비자들은 특히 한국 전자 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중국 제품에 비해 한국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5년 이란 수출의 24.39%, 수입의 25.32%를 차지하며, 2009년부터 수출과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란의 최대 경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최경주, 2017).

<표 6-3> 한국-이란 국가 간 수출입 현황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8	2,311	-70.4	4,063	-73.4	-1,752
2017	7,803	115.4	15,291	219.9	-7,488
2016	3,622	-2.9	4,780	101.9	-1,158
2015	3,731	-10.4	2,367	-48.3	1,364
2014	4,162	-7.1	4,578	-17.7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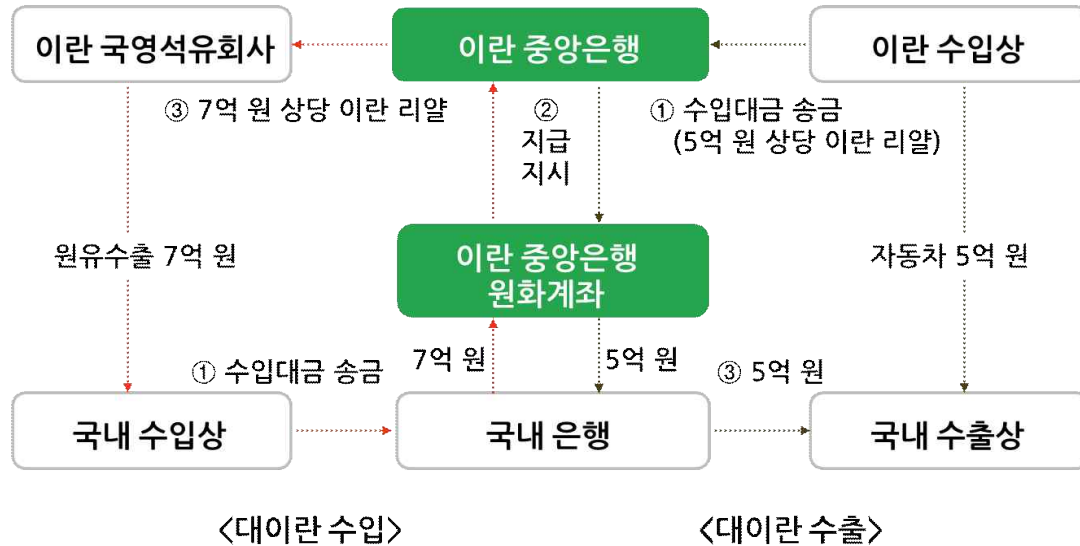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은 2017년 기준 이란의 최대 교역국 중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이란의 최대 교역국 3위의 자리를 지켰지만, 2017년부터 터키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위의 <표 6-3>에서 보여진 대로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던 2017년에는 수출이 115.4%증가하고, 수입은 무려 219.9%나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수출과 수입 각각 70% 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위기를 처한 2018년부터 오히려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을 볼 때, 한국이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취하는 데에 따라 이후 이란 경제 회복 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입하여 대이란 교역을 지속해왔다. 원화결제시스템이란 한국과 이란 기업 간 무역 거래 시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란 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하였다가, 국내업체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

터, 2016).

<그림 6-3> 한-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의 원리*



자료: KOTRA 홈페이지

원유 수입 이외에도 국내 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화결제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비제재 품목 대 이란 수출을 위해 결제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한다(이권형 외, 2018년). 다시 말해 위의 원화결제시스템은 우호적인 한국과 이란 경험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체계인 것이다.

4. 한국과의 협력 방안

그렇다면 한국은 이와 같은 이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란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 한국은 이란의 주요 교역국이며, 이란 산 원유가 한국의 원유 전체 수입량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우리 산업의 제 2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콘덴세이트는 이란 산이 수입량의 50%이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이란 지사 폐쇄 및 수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회사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듯이 이란 제재 기간 동안 지금과 같이 이란 시장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린다면, 이후 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번 중국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 가져

* 홈페이지 내 이란 환율시장 관련 유의사항 및 원화시스템 관련 설명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오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란은 한국과 외교적인 면이나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이란이 의미하는 정치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란 시장은 다른 어떤 중동 시장보다 규모면에서 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사실상 이란 시장 내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고,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산을 선호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란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대 이란 제재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등을 돌려 이란 정부나 시장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재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겠지만,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시장에 대한 사업성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민간적인 수준에서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2018년 말 한국의 일부 은행들의 행보는 앞으로의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란 2차 경제 제재를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란 유학생들의 은행계좌를 폐쇄시켜 논란이 일었다. 해외 송금용 계좌가 아닌 장학금과 생활비를 넣는 입출금용 원화계좌지만 이란인이란 이유로 국가초청유학생들마저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계좌 해제를 통지하여, 국내 거주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어 이란인 고객들에게 2018년 11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하였다. 한국 주요 시중 은행들은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란인 유학생·근로자만 계좌 개설 및 거래를 허용하였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란에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일수,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쟁점 및 전망 “, 정치·정보연구, 제 22권 1호.

이권형 외, 2018,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한 이란 경협 관계 전망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경주, 2017, ch.6 이란의 경제 발전과 현황, 『이란을 가다』, 계명대학교 실코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펴냄.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 2016, “이란 경제 업무 가이드라인”

<온라인 자료>

안령 외, 2018, 對이란 제재 복원, 중동 주요국 및 기업 반응조사 (디지털자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두바이 무역관 [외]편. 한국무역협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0,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S:
Challenges to Steady Growth.
KOTRA 2019년 이란 진출 보고서

Abstract

The Crisis of Iran, How does Korea deal with?

Gi Yeon Koo

Iran and South Korea have been strong and active bilateral trading partners. Despite disagreements over Iran's nuclear enrichment activity, Korean companies are eager to invest in Iran and the two countries have tried to encourage bilateral investment. However,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pulled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Iran is confronted with financial and diplomatic crisis. President Trump is initiating a new deal with Iran and seeks to isolate Iran from the global market. Iran's economy is under unprecedented pressure due to the re-imposed sanctions of the U.S., especially the oil sanctions, with negative 1.5 percent growth in 2018 and an expected negative 3.6 percent growth in 2019. Iran's current year-on-year inflation rate rose to 40 percent in February 2019.

Iran and Korea agreed to form a won-based settlement system in September 2010 to bypass trade restrictions and promote trade without violating trade embargoes. Under this system, the South Korean oil refiner is able to purchase crude from Iran and deposit the money into Korean bank accounts. The Central Bank of Iran would pay the Iranian seller with Iranian Rial, which then concludes the transaction. As U.S. sanctions against Iran had come into force, South Korea has been granted a waiver from the United States on Iranian oil imports. However, South Korean buyers have been cutting their Iranian crude-purchase costs in recent months due to the uncertainty over the trade deal with Iran.

이라크와 한국의 생존전략

이수정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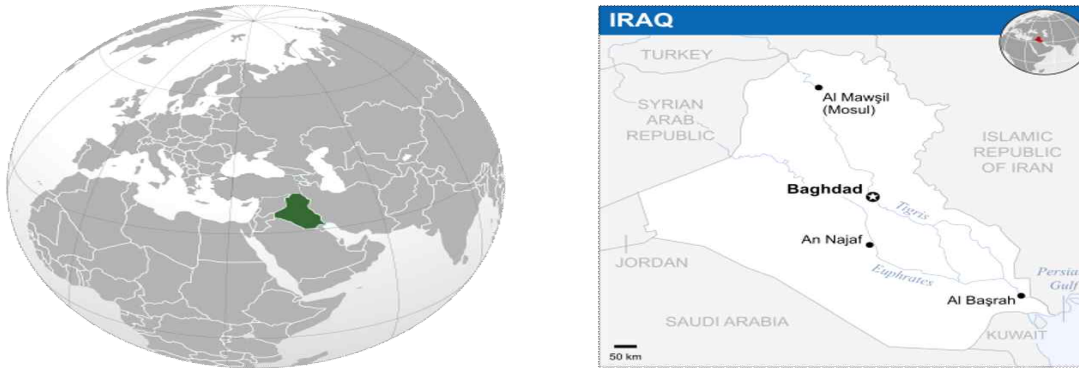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라크에 대해 물어 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이란-이라크 전쟁, 1차 걸프전, 2차 걸프전, 사담 후세인 축출, IS의 등장과 전 세계적인 공포 등 부정 일변도의 대답이 다수 일 것이다. 반면, 바그다드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중심지였고,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세계의 문명을 이끌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라크의 국가 개관을 먼저 다루어 이라크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현대사의 흐름을 가볍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IS 등장과 쇠퇴 이후 이라크라는 국가의 향후 긍정적 전망과 위험에 대해 SWOT 분석에 기반하여 정치, 경제, 국방, 기반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국가 개관 및 간추린 역사

서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는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의 이집트, 남동쪽에 쿠웨이트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요르단 서쪽에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다.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바그다드로 영토의 중앙에 위치한다<그림 7-1>. 총면적은 432,072km²으로 세계에서 58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라크의 공식명칭은 이라크 공화국이며 민족은 아랍인, 쿠르드인, 앓시리안인, 야지드인, 아르메니아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016년 기준 인구수는 3천 7백만 명이며 이 중 95%가 무슬림이다.(이후 몇 년간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라크 지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국가

<그림 7-1> 이라크의 위치와 지도



자료: 위키피디아

로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달해 왔다. 이라크 지역을 지배한 왕조는 아키메네스왕조(Achaemenid), 그리스 왕조(Hellenistic), 파르티아 왕조(Parthian), 사산 왕조(Sassanid), 로마 왕조(Roman), 라쉬둔 왕조(Rashidun), 우마위야 왕조(Umayyad), 압바스 왕조(Abbasid), 아유비드 왕조(Ayubid), 몽골(일한국, Mongol, Ilkhanid), 사파비 왕조(Safavid), 오스만 왕조(Ottoman)가 있다. 이 중 우마위야 왕조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이라크 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라크의 영토는 20세기 오스만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었다. 이라크는 1921년 파이잘 1세(Faisal I)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라크 왕국을 건립하였고, 193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58년에는 왕정이 무너지고 이라크 공화국이 설립 되었다. 이라크는 1968년부터 2003년까지 아랍 사회주의당인 바아스당(Ba'ath Party)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림 7-1> 현대 이라크와 미국 (분쟁사)

미국의 이라크 개입 주요 일지

1980~88년 反美 성향의 이란과 전쟁하는 이라크에 무기 지원		2003년 3월 '대량살상무기' 제거 명분 내걸고 이라크 침공 → 2차 이라크전 발발
1991년 1월 친미 성향의 쿠웨이트 침공한 이라크 공격 → 1차 이라크 전쟁(걸프 전쟁)		2003년 12월 후세인 체포
1991년 2월 '사막의 폭풍' 작전 벌인 미의 압승으로 전쟁 종료		2006년 12월 후세인 사형
2002년 2월 9·11테러 계기로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		2010년 8월 오바마,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임무 종료 선언
		2011년 12월 미군 완전 철군
		2014년 6월 수니파 반군, 모술 등 주요 도시 장악 → 미국 개입 가능성 시사

자료: 조선일보

2003년 미국과 연합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사담 후세인이 실각하고 바아스당도 권력을 잃었다. 이 후 다당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11년 공식적인 미군 주둔은 종료 되었으나,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특히 ISIL(훗날 IS)의 등장은 이라크 내부 사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IS는 이라크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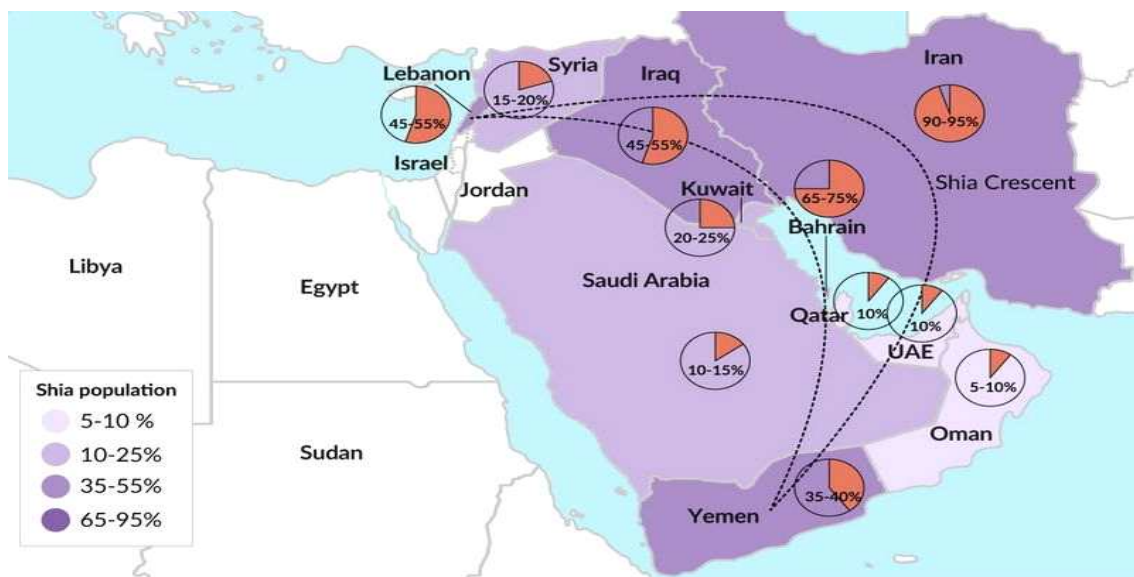
지역을 차지하고 쿠르드 및 이라크 정부군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다. 2017년 12월 9일 이라크 총리인 하يدر 알-아바디(Haider al-Abadi)는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영토 수복을 공식화 하였다.

3. 이라크 정치 SWOT 분석

2018년 10월 2일 이라크 의회는 5개월간의 내홍을 마치고 쿠르드계 대통령 바르함 살리를 임명하였다. 바르함 대통령은 즉시 시아파 총리인 아델 압둘 마흐디를 임명하여 내각을 안정화하고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통령이 명목상 국가 원수를 지내고, 실질적으로 총리가 국가의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EIU의 레포트에 따르면 아델 압둘 마흐디의 경우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임기 내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델 압둘 마흐디의 임기(2019-2023) 동안 상당 수준의 정치 불안정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라크 정치가 불안정 한 것만은 아니다. IS에 대항하는 동안 이라크라는 국가의식이 강해졌고, 이들에 대항하는 군대의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IS 이후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동안 소외 되었던 순니파 무슬림과 관계를 개선할 여지도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림 7-3> 비옥한 초승달 지대 내 쉬아 벨트



자료: bintel.com.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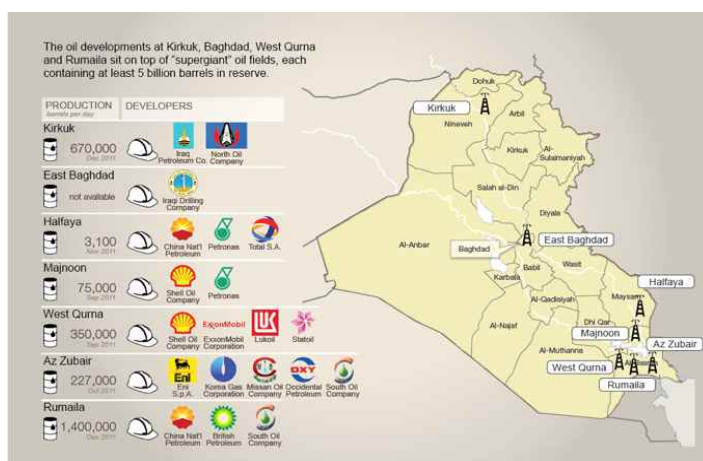
이에 대한 사회 불만의 고조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이기도 하다.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시아 벨트의 주축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벌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사회 안정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S를 모두 축출한 후, 순니파의 지지까지 받게 될 경우 이라크 정부의 위상은 더욱 고조 될 것이다. 또한 2019년 5월 12일 이 후, 성공적인 내각 구성과 정당 정치 교체를 이루어 낸다면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다양한 정당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정당이 쉬아파기 때문에 성공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4. 이라크 경제 SWOT 분석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도 경제는 적은 수치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는 석유와 관련된 국제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현재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서 3위이다).

<그림 7-4> 이라크 지역 내 오일 생산량과 투자 회사



자료: 알자지라 신문사

기타 경제 수치 모두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IU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각 GDP 성장률은 표 1과 같다. 이라크의 경제 발전 수준은 세계 및 중동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작년의 실질 GDP 상승률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5년치에 대한 GDP 상승률 및

<표 7-1> 이라크 경제관련 예상 수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상승률	1.4	4.7	3.0	2.6	2.4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	0.4	1.0	1.5	2.5	2.5	2.8
재정수지(GDP 대비 %)	4.2	1.4	-2.6	2.0	3.0	1.6
경상수지(GDP 대비 %)	15.5	11.0	6.0	8.0	7.6	6.0
환율(US 달러 대비)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자료: EIU 국가보고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정부는 매 해 88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석유 수입이 대부분을 충당해도 이라크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 정치적 안정, 투자자의 신뢰 획득이 중요하다. 이라크의 국가 수입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거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곧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이라크의 천연자원을 담보로 이라크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18 년도 국가 예산의 총액은 약 880 억 달러로 석유 수입은 배럴당 46 달러에서 일량 380만 배럴을 수출 할 전망으로 산출되었다. 비 석유 수입도 포함 세입은 약 779억 달러 재정 적자는 106 억 달러 정도였다. 재정 적자는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개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끌 사업으로는 기반 사업과 전자통신 사업이 손에 꼽히는데 이는 워낙에 낮은 산업 수준을 갖고 있는 현실에 대비해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담 후세인의 통치를 받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한 탓에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정권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자유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매우 적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은 경험 탓에 성장하는 산업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석유와 관계없는 산업을 등한시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은 취약점으로 꼽힌다. 1964 년에 은행과 주요 산업이 국유화 된 이후 이라크 경제에서 국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투자는 부동산과 로지스틱스 부분의 소규모 산업과 일부 농업 분야가 전부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의 경제는 불투명 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졌고,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에 경제 법규의 개정 및 투자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라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대추구국가의 부작용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자원과 관계없는 다른 산업 보다 자원에 기반 한 사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함으로써 산업 발달의 위기성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점, 이란과 집약적으로 무역을 행한다는 점 등은 경제 발달의 동력으로 꼽힌다. 이라크는 국가 재건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해외에서 직접 이주하여 일하는 고위 계층 노동자의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점들도 인재의 이라크 입성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경제 발전 저해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쿠르디스탄에서 언제든지 분리 독립 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라크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5. 이라크 군사안보 SWOT 분석

<그림 7-5> 세계 무기 수출입 순위*



자료: 중앙일보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방산 수출의 주요 3개 대상국 중 하나가 이라크인 만큼(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

결과적으로 이라크 사회의 전 분야는 군사 및 기반 사업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군사 안보 전략은 최근 축출된 IS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 내에 잔존하는 테러 세력과 범죄 예방, 국가 안보 안정을 위하여 군사 용품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생적인

*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세계 10위국 안 진출을 목표로 방산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 후,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방산관련 사업 내 파트너 쉽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그다드를 방어하고, IS로부터 내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활발한 무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 이라크 국방비 관련 예상 수치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대비 국방비 지출	9.0	9.2	9.4	9.6	9.8
국방비(백만달러)	18,581.6	21,215.0	23,982.1	26,285.0	28,601.9
전년대비 국방비 증가율	9.7	14.2	13.0	9.6	8.8

자료: BMI 보고서

이라크의 국방비 GDP 대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그 액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비 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림 7-6> 이라크 납품용 전투기 배선 점검



자료: 중앙일보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이라크의 방산 시장은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등 방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자주 국방을 목표로 방산 시장을 성장시키기 시작한지 40년만의

꽤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항공기, 잠수함 등의 수출이 극대화 되면서 시장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 시장 또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 이라크는 2013년 12월 T-50을 개량한 경공격기 FA50을 24대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까지 18대가 인도되었다.(중앙일보) 이외에도 우리는 이라크에 국산 총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이라크의 방산시장은 방산 업계의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시장성을 갖고 있다. 다만 지역 내 안보 불안정성이 향후 수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반 산업의 취약성이 국방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 산업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대부분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가가 하락할 경우 자금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6. 이라크 기반 산업 SWOT 분석

이라크 건설 부문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외국 정부고가 이라크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라크 내에 건설 붐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중국발 자본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3> 건설 부문 관련 지표

건설 부문 가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GDP 대비(%)	16,647	18,712	20,865	23,065	25,297	27,740	30,319	33,145	36,242	39,640
전년 대비 성장률(%)	11.20	10.00	8.01	6.04	5.18	5.16	4.08	4.82	4.85	4.87
GDP 대비(%)	6.7	6.9	7.1	7.2	7.3	7.5	7.6	7.7	7.8	7.9

자료: BMI 보고서

그동안 이라크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기반 산업이 대부분 붕괴되었다.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반산업의 발달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석유를 통한 안정적 자금 확보와 정부 주도의 발달은 건설부분에서 안정적인 투자 정책을 이끌어 내게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 또한 3월 13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라크 재건 시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림 7-7> 이라크 재건시장 진출 세미나



자료: EBN

나아가 한화 건설은 이라크 복합 개발을 통해 수익이 급증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나아가 현대 건설은 이라크와 알제리에서 잭팟을 기대한다는 언론 제보를 내어 놓으며 이라크 투자를

북돋아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반 시설이 전무한 이라크 지역 내 투자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향 후 가장 전망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집중 받고 있다.

<그림 7-8> 한화 건설 이라크 수주 금액과 신도시 조감도

일정	내용	금액	비고
2012년 5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본계약 체결	총 공사금액 7795000만 달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남쪽 100km 떨어진 비스마야에 10만 가구 신도시 건설
2012년 10월	1차 선수금 수령	779500만 달러	공사금액의 10%
2013년 10월	1차 중도금 수령	398750만 달러	공사금액의 5%
2014년 4월	2차 중도금 수령	398750만 달러	공사금액의 5%
2014년 10월	3차 중도금 수령	398750만 달러	공사금액의 5%
2015년 4월	추가 인프라시설 공사 수주	21억2000만 달러	학교, 병원, 관공서, 전력, 상·하수도, 도로 등 추가공사

자료: 한화건설



그러나 기초적인 건설 기구의 부재나 기술력의 부재는 공정을 공기 안에 마무리 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안보, 경제의 불안정성은 이라크 내 전 분야에 걸친 불안정성으로 장폭하고 있다. 특히 IS가 완전히 격퇴 되었다 할지라도 군사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위험성도 이라크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쿠르드족과 이라크 중앙정부 간의 긴장도 잠재적 위협 요소이다.

또한 전력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약점으로 작용함에도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무역관계에 있는 이해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가 내어놓는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규모 사업의 수주는 모든 위험성을 재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축 단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IS가 파괴한 지역의 거주 기반 시설 재건 사업은 향후 국가 주도 발전의 수주 사업으로 손에 꼽히고 있다.

항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이라크 건설 사업의 위험성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라크 정권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다양한 종파와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만큼 언제 정권이 전복 될지 알기 어렵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이전 정권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 이라크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꾸준히 이야기 한 것이지만 역시 유가와 이라크 자체의 안보, 안전 문제는 이라크가 추진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다. 즉, 유가와 안보, 안전이 보장되는 한 이라크는 모두가 노릴만한 시장이 될 것이고, 유가와 안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 이라크의 미래성은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가진 이라크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 하다. 다만 국가 내 정치적 혼란과 IS와 같은 이슬람 과격 세력의 성장, 정부 및 기간 산업 내부의 이권 다툼과 부패가 경제 발전을 막아 왔다. 2019년이 막을 올리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끝없는 위협 요소로 논해진 정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국민들 또한 그동안의 분쟁을 정리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유권자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교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라크와 한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논하자면 국방과 기반산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는데, 한국의 방산 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라크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 관계 구축 일 것이다.

<그림 7-9> 한국군 해외 파병 일지



자료: 연합뉴스

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이라크와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면 이 또한 이라크와 우리 관계를 진일보시킬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기반 산업 교류이다. 본고에서는 건설산업만 다루었지만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라크는 현재 전력,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 발달시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 뿐 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무역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산 산업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군대 파병과 주둔의 문제이다. 본고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의 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자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군대 주둔

Abstract

The Survival Strategy of Korea and Iraq

Su Jeong LEE

This paper takes you to Iraq and gives you an overview of the country still considered dangerous to many. This paper consists of the Introduction to Iraq, Brief History,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Infrastructure. Iraq remains as a dangerous country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unstable politics, little to no economic growth and the war on ISIS in the past. Now, the country is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with its newly-elected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The defeat of ISIS and the increase of oil prices would contribute to a slow, but steady economic development.

Unstable economy and politics in Iraq, however, still pose as threats. Even in such a grim situation, this paper suggests working together with Iraq in military and infrastructure sectors. This would help the country secure military and economic stability and prosper together.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

김영훈*

1. 서론

제조업은 역사적으로 총 3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에서 시작되었다. 1784년에 최초의 기계식 방직기가 개발되면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2차 산업혁명의 발생지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포드자동차였다. 헨리포드(Henry Ford)가 신시내티(Cincinnati) 도축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차 생산에 적용하면서 대량생산 시대를 가속시켰다. 3차 산업혁명의 효시는 1970년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 불리는 전자식 자동화 컨트롤러의 개발이다. 기계설비가 전자기기와 융합되면서 대량생산시스템은 다시 한 번 도약한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전자기기처럼 새로운 동력원의 발명에서부터 촉발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은 단일 동력원의 개발보다는 센서·로봇·3D 프린팅·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서로 융합되면서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 생태계의 자동화 및 연결성이 극대화(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되고 의사결정에 사물까지 참여하면서 생산성이 실시간 최대가 되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다양한 변화 중에서 제조업에 주목한다. 2장에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3장에서 독일·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 제

* 現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업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5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해 어떠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

<표 8-1>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초기 혁신	 1784년 기계식 방직기	 1870년 컨베이어 벨트	 1969년 PLC	 2010년 이후 ICT와 제조 융합
동력원	수력, 증기기관	전기	전자기기	사물인터넷
생산방식	기계화	대량생산, 분업	자동화	극단적 자동화
생산주체	사람	사람	사람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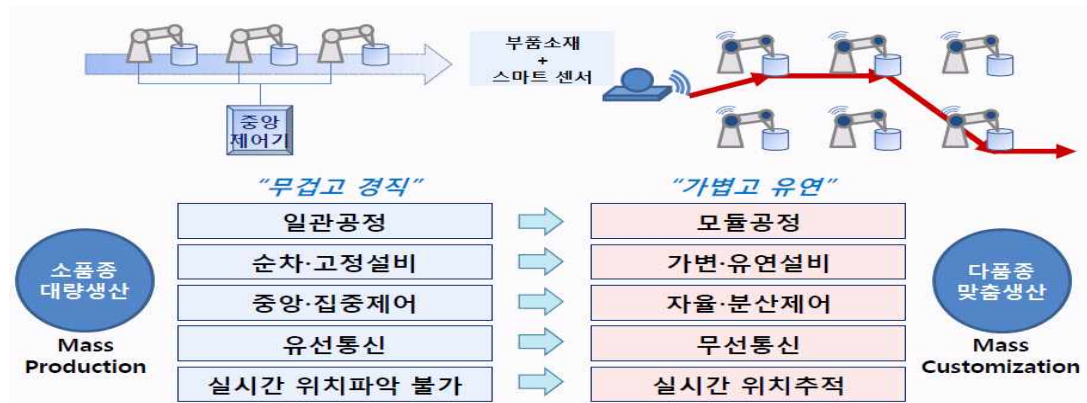
자료 : 포스코 경영연구원(2014) 수정

2. 4차 산업혁명과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성공방정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 변화로 요약된다. 첫째, 소품종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의 위상은 약화된다. 대신 다품종 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Koren, 2010). 이상적인 제조업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때마다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 부품소재부터 가공 설비까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소통한다. 부품소재에는 스마트 센서가 부착되고 고객의 주문내역이 입력된다. 센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하면서 설비에 부품소재가 어떻게 가공 또는 조립되어야 하는지 지시한다. 인근설비들은 현재 가동률 및 운영계획 등을 서로 확인하고 경제적으로 최적의 프로세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제조를 수행한다. 모든 정보가 센서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의 주문한 제품이 어떤 가공단계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생산자는 센서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래와 같이 가볍고 유연한 생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다품종 맞춤 생산이 용이해진다<그림 8-1>.

<그림 8-1>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맞춤생산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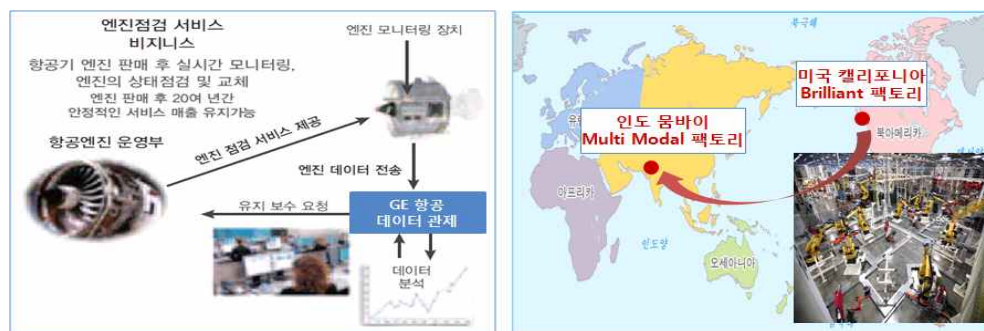


자료 : 박형근(2014)

둘째, 제조만으로는 저성장 위기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모델(Manufacturing Servitization)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이다. GE는 항공엔진을 판매한 이후에도 엔진에 부착하고 엔진가동 시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한다. 관제센터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진의 연소상태 점검, 보수 또는 교체주기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2). 이처럼 제품판매 외에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제조서비스 모델은 팩토리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팩토리의 모든 생산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원격으로 팩토리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GE는 인도 뭄바이에 항공엔진을 포함한 복수의 고부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 Modal) 팩토리를 건설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관제실(Brilliant Factory)에서 원격으로 인도 공장의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6-2> GE의 항공엔진 서비스(左) 및 브릴리언트팩토리(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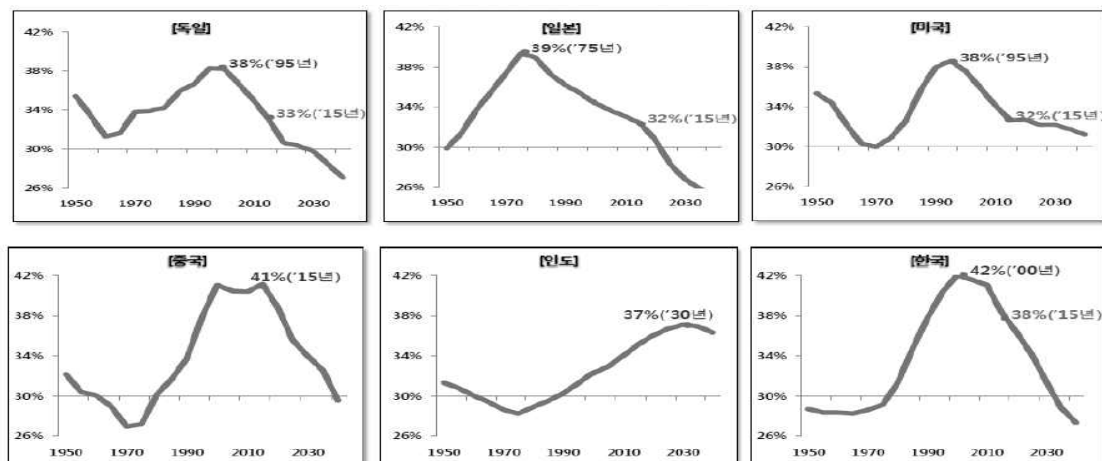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2017), GE 홈페이지 수정

셋째, 개도국의 많은 해외공장들이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하고 본국으로 U턴하게 될 것이다. 독일·일본·미국·한국 등 주요 제조강국의 생산인구는 이미 감소추세이며, 이제까지는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위기를 극복해왔다<그림 8-3>. 하지만 생산거점이라 생각했던 개도국의 생산인구도 중국을 시작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쫓아 생산거점을 이동했던 유목모델이 덜 중요해진다. 시장 근처에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고 고객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이미 로봇과 3D 프린팅 등으로 구성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본국에 건설하고 안스바흐(Ansbach)라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맞춤 운동화를 제작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다품종 맞춤생산 시대를 여는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다.

<그림 8-3> 주요국 핵심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추이 및 전망*



자료 : UN 경제사회국(<http://esa.un.org>)

3. 주요국의 대응 전략

1) 독일 인더스트리 4.0, 제조와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독일은 2012년부터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을 중심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에서 2가지 대표전략을 소개한다.

* 핵심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

첫째, 독일은 소품종 대량생산 시장은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대신 다품종 맞춤형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생산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모듈러-무빙 팩토리(Modular and Moving Factory)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청사항에 생산라인을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변화시켜 맞춤형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것이다(포스코 경영연구원, 2018). 기존 고정설비에 SW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HW 컨셉을 도입해서 고객맞춤 고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중심 전략으로 제조만으로는 시장지배력 유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연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스페이스(IDS; Industrial Data Space)’ 사업을 통해 산업용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88개 회원사가 14개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제조 플랫폼과 데이터 및 AI 플랫폼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은행·물류·의료 등 다른 산업과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그림 8-4> 모듈러-무빙 팩토리(左) 및 IDS 사업의 위상(右)



자료 : 포스코 경영연구원(2018)

2) 미국 산업 인터넷, 테스트베드로 사실상의 표준 선점

미국의 전략은 업종별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GE를 중심으로 200여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을 통해 상기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전략인만큼 27개의 테스트베드 사업이 착수된 상태인데 제조혁신 분야의 대표적인 테스트베드로는 센서 기반 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Asset Efficient), 인공지능을 통한 최적 제조 프로세스(Optimizing Manufacturing Process with AI), 팩토리를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원격으로 제어(Smart Factory Web), 3D 프린팅을 접목한 협업제조(Smart Printing Factory) 등이 있다<그림 8-5>.

<그림 8-5>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주요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자료 :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홈페이지(www.iiconsortium.org)

3) 일본과 중국, 전략분야를 선택하고 집중 지원

일본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현장을 중시한다. 모노즈쿠리 등 장인에 대한 존중, 사람을 중시하는 도요타(Toyota) 방식의 자동화(自動化) 등에 녹아있는 제조철학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에도 깊숙이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HW 분야는 인간 중심의 센서 및 로봇 사업, 특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오감 및 신체 한계를 보조하는 협업로봇(Cooperative Robot)이 주력 아이템이다. SW 분야는 현장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이 강조된다. 중앙서버 중심의 클라우드(Cloud) 방식보다는 속련공이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손쉽게 도와주는 분산처리 방식의 엣지(Edge) 컴퓨팅이 주목받는 것이 증거이다.

중국은 제조혁신 후발국으로 ‘제조 2025’의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10대 전략분야가 차세대 IT 기술, 항공우주설비, 공장기계 및 로봇, 첨단 농기계, 해양공정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설비, 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 기반 자동차, 바이오 의약 등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4.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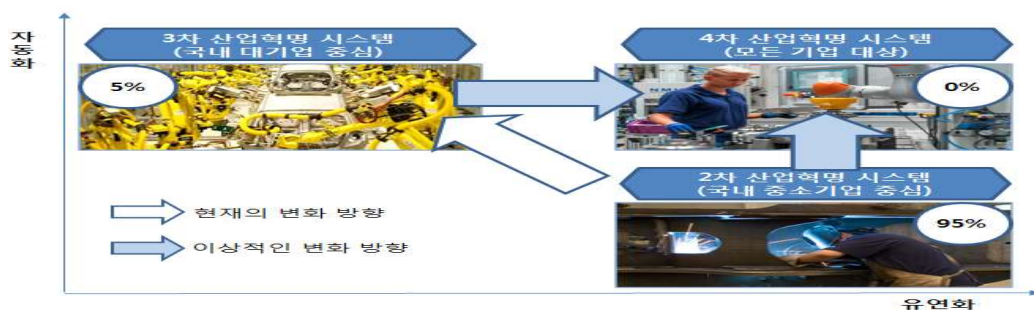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2014년 ‘제조혁신 3.0’ 정책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론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1-3장에서 제시한 국내외 트렌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제조혁신 정책의 현황을 간략히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혁신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역량 향상에 편중되어 있다. 생산설비의 자동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유연생산 시스템을 희생하는 구도이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자동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R&D 및 생산 모델에 대한 시도는 부족하다.

<그림 8-6>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 시스템은 2차와 3차 산업혁명의 유산(Legacy)이 혼재되어 있다. 5%의 소수 대기업은 자동화 설비투자를 통해 수준 높은 3차 산업혁명 시스템을 보유했으며 소품종 대량생산 시장을 지배해왔다. 반면 95%의 중소기업은 2차 산업혁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량생산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다품종 주문에 대해서는 숙련공의 노하우에 의존하여 유연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게 대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혁신 정책은 중소기업에 자동화 SW를 보급하고 3차 산업혁명의 주력 시스템을 확산하는데 치중한다. 소품종 대량생산을 뛰어넘어 다품종 맞춤형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고 생산라인의 HW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림 8-6> 우리나라의 제조혁신 정책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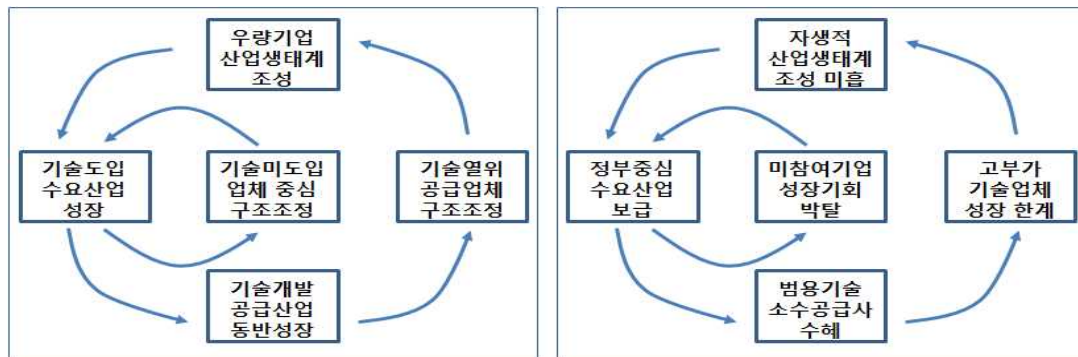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국ICT융합네트워크(2018)

* 저자 직접 수정

둘째, 우리나라 제조혁신 전략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전자·조선·제약·패션 등 수요산업을 위한 보급 중심이다. 센서·로봇·3D 프린팅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산업에 집중한 육성 전략은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요산업과 공급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그림 6-7>.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관련기술, 특히 SW를 영세기업에 보급하는데 집중한다. 영세기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주로 기초 범용 아이템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또는 신개념 생 산모델 개발을 시도하기 어렵다.

<그림 8-7> 공급-수요산업 동반성장 선순환(左) 및 동반 후퇴 악순환(右)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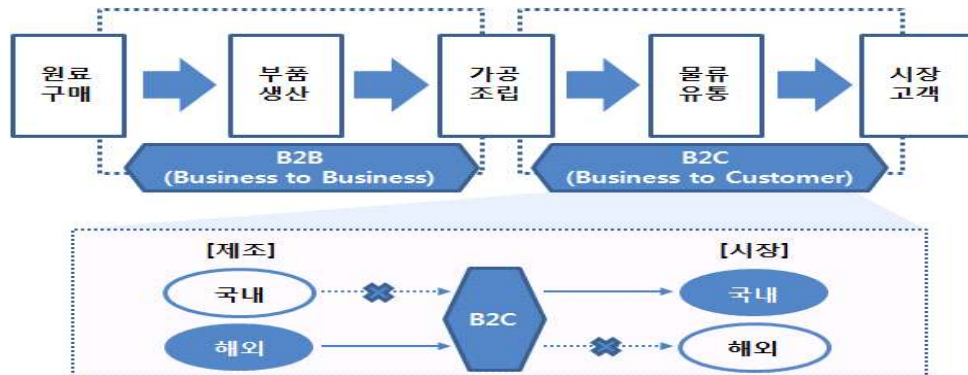


셋째, 창업생태계가 B2C(Business to Customer)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제조 생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품소재 중심의 B2B(Business to Business) 창업은 부족하다. 창업과 제조 생태계 성장이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B2C 창업이 활발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시장의 급변하면서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반의 패션·가구·화장품·부동산 등의 유통 및 거래 플랫폼이 대표적인 B2C 창업이다. 하지만 B2B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존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견고하다. 시장변화가 B2C에 비해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규벤처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B2C 벤처들은 해외제조사의 제품을 국내시장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과 해외시장을 연계하는 플랫폼은 미흡하고 역량도 부족하다<그림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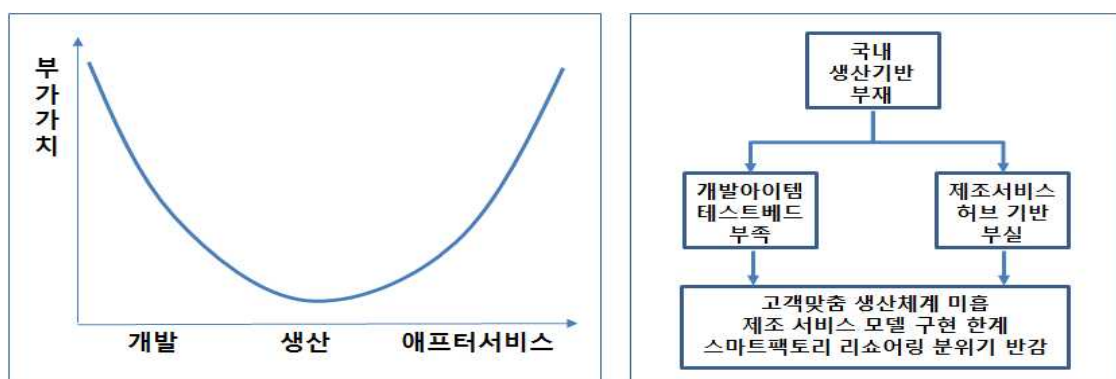
<그림 8-8> B2B-B2C 생태계 구조 및 문제점



넷째,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테스트 및 생산기반 인프라, 스케일업(Scale Up)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스마일커브 이론에 따라 우리는 제조업의 생산역량을 부가가치가 낮다고 등한시해 왔다.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개발과 A/S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생산기반이 없는 상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객맞춤 제품 개발과 제조융합 A/S 서비스가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의 센서는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테스트 및 생산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스케일업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개발과 A/S 등을 통해 제조업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디어-제품 생산-제조서비스를 집적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하다.

<그림 8-9> 제조 스마일 커브(左) 및 생산기반 부재에 따른 문제점(右)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제조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

대 준비수준은 140국 중에서 25위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하다(UBS,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강국의 지위를 위한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5.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존 전략

1-4장에서 설명한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 선진국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4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하겠다.

첫째, 중소기업 중심의 SW 보급보다는 중견기업 주축의 신개념 R&D 및 생산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80%의 영세중소기업보다 20%의 혁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제조혁신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도 민관 공동으로 대형 R&D 또는 신개념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형 핵심사업을 주축으로 생태계를 조성할 때, 더 많은 기술혁신 중소벤처들의 참여기회도 증가한다.

둘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자산이 될 것이다. 자동차·가전·조선·화장품 등 아직까지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방대한 산업용 데이터를 수집-가공-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데이터 가공 및 유통에 특화된 기술벤처는 마스터플랜 하에서 육성해야 한다. 주요산업과 공급산업이 상생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셋째, B2B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B2C 벤처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수적인 B2B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기술도입에 적극적인 기업 또는 신기술 B2B 창업벤처 등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통합해야 한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지원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스타트업보다 스케일업 생태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테스트베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지원을 스케일업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기술검증-제품안전성-현장적용 등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테스트베드 밸류체인 고도화 사업을 제안한다.

6.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정의에 따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 제조업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분야에서는 다품종 맞춤형생산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고 제조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할 것이며, 해외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되어 국내로 회귀할 것이다.

독일·미국·일본·중국 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수준은 높지 않다.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는 영세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주축이 된 신개념 R&D 투자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수요산업과 공급산업의 상생모델이 필요하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서 시작해야 한다. 생태계 활력을 위해 B2B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창업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창출보다 스케일업 정책도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전략은 산업생태계 차원의 거시전략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에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은 물론 제조분야와 ICT 분야, 경영진과 노조까지 공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중장기 및 생태계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겠다.

Abstract

Survival Strategies of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eong Hoon Ki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ransforming the paradigms of manufacturing by three megatrends of mass customization, manufacturing servitization and reshoring based on smart factory.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t fundamental ways to prepare for this change in Korea. We have only focused on the dissemination of low-level manufacturing software. In addition, there is no ecosystem for supply as well as user industries of main technologie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suggests four survival strategies of our manufacturing sectors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large-scale and experimental R&D projects initiated by medium-size companies. Second, the platform to circulate industrial dataset should be built for supply as well as user industries. Third, the rapid restructuring process of insolvent firms and the formation of startup ecosystem sh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B2B sectors. Finally, the infrastructure to scale up startups should be constructed.

참고문헌

- NBER(2015),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10935
-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 Yoram Koren(2010), The Global Manufacturing Revolution, John Wiley & Sons
- 박형근(2014), ‘인더스트리 4.0’ 이 가져오는 제조업 현장의 변화, 코오롱 베니트 발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과제
- 이정동(2017), 축적의 길, 지식노마드
- KT 경제경영연구소(2017),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한즈미디어
- 포스코 경영연구원(2014),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 제조업 청사진, POSRI Issue Report
- 포스코 경영연구원(2018), 디지털 트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POSRI Issue Report
- 한국 ICT 융합네트워크(2018), 독일 인더스트리 4.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현황과 정부지원방안, Issue Report
- GE 홈페이지, <http://www.ge.com>
- UN 경제사회국, <http://www.esa.ug.org>
-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http://iiconsortium.org>

주력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주 원*

1. 들어가며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상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떠올린다. 즉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위기라고 느끼게 된다. 지금 한국경제의 모습은 20년 전의 아찔했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위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 과연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최근 한국경제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위기라는 표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본다면 위기라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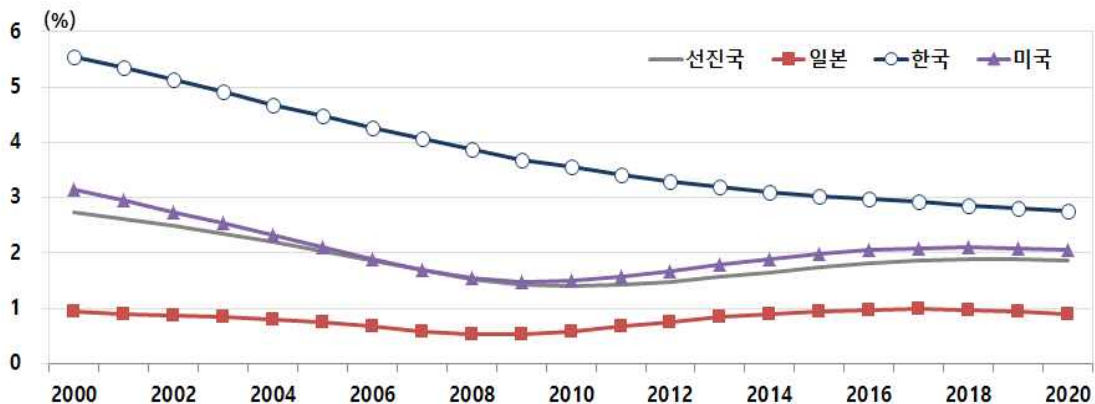
바로 끓는 냄비 안의 개구리를 의미하는 ‘The boiling frog syndrome’이다. 끓는 물이 있는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 냄비를 탈출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그 안에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죽고 만다. 최근 많은 신문사설에서 한국경제를 끓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고 있다. <그림 9-1>을 보면 주요국가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5.6%에서 2018년 2.8%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가진다. 한편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과 2018년의 두 시점만 놓고 본다면 2.7%에서 1.9%로 하락하였다.

* 現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 잠재성장률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버블을 만들지 않고 현재 가용한 모든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시점에서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가진다. 이에 따라 2000년 한국과 선진국 간 성장률 격차는 2.8%p에서 2018년 0.9%p로 크게 축소되었다.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다는 것에 안심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던 경험을 가진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성장력의 고갈은 고용절벽, 사회양극화 심화, 정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한국사회를 궁지에 몰아가게 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을 동반하는 위기는 당장은 힘들지만 금방 복구가 되는 위기이다. 그러나 성장력이 조금씩 훼손되어 가는 이러한 방식의 위기는 경제주체들이 그에 적응해 가면서 마치 끓는 물 안의 개구리처럼 탈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그 끝은 결국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림 9-1>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한국경제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이하에서는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은 무엇이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보았다.

2. 주력 산업의 현황

1) 주력 산업의 정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의 위기는 산업의 위기가 그 본질이다. 산업의 위기라는 것은 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 산업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 가계, 기업의

* HP필터링을 이용한 추정

세 경제주체들 중 오직 생산의 주체인 기업만이 사회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 기업이 뛰어노는 공간이 바로 산업이다.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산업에서 뛰어노는 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많이 사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커가고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된다. 그렇게 경제를 앞에서 끌고 나아가는 산업을 우리는 주력 산업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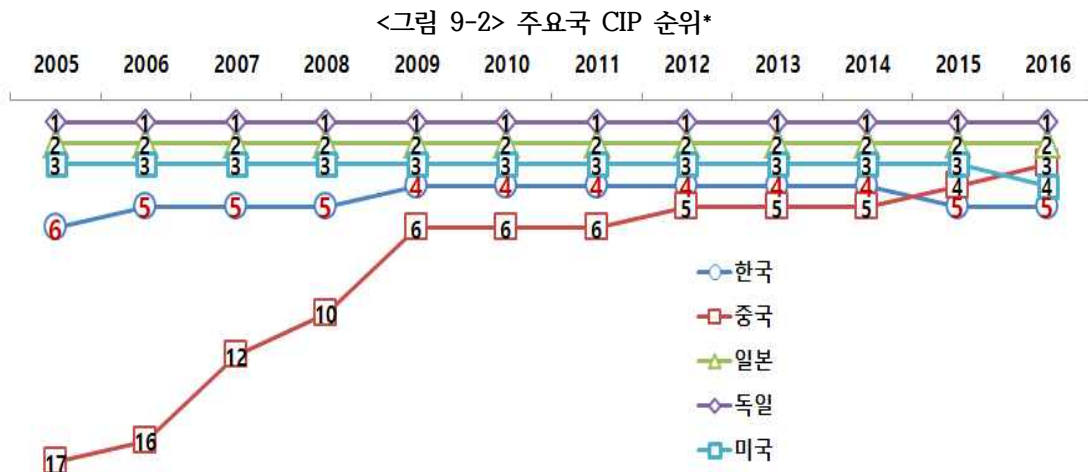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다. 물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훨씬 크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제조업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인 반면 서비스업은 53.7%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보는 이유는 제조업에서 기술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질 좋은 고용이 창출되고 있고 외화 가득은 제조업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제조업이 곧 주력 산업은 아니다. 과거 경공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주력 산업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제조업 중에서 중화학공업과 IT산업이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볼 수 있다.

2) 주력 산업의 현황

최근 한국의 주력 산업의 모습은 결코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착각에 빠지곤 한다. 바로 우리 제조업이 마치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제조업의 위상은 과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철강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한지 이미 오래이며 주지하다시피 조선과 자동차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때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 스마트폰은 중국시장에서 퇴출된 지 오래이다. 오직 반도체만이 잘 버티고 있지만 그것도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와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과연 언제까지 그 영화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 중 UNIDO(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공업경쟁력지수)를 보

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6년 현재 5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2005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한국은 당시 6위로 중국(17위)보다 한참 앞서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고 2016년에는 미국마저 넘어서 지금 중국 제조업은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8a).

그러나 미래는 더욱 어둡다. <표 9-1>에 따르면 현재 주력 8대 제조업 중 우리가 우위에 있는 업종은 석유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인데, 3년 후에는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모두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9-1>. 그리고 우리가 최대경쟁국에 대해 열위에 있던 업종들은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거나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주력 산업 위기의 원인

주력 산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자만과 나태함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주력 산업들이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가 바로 외환위기이다. 후진국형인 물량중심의 산업생산구조를 선진국형인 질적 생산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

* 원자료에서 2016년 통계치 추가

<표 7-1> 업종별 한국의 최대 경쟁국과 경쟁력 지수(p)

	현재		3년 후	
	최대경쟁국	지수(한국=100)	최대경쟁국	지수(한국=100)
석유제품	중국	90	중국	100
석유화학	사우디	110	미국	110
철강	일본	110	중국	100
자동차	일본	110	일본	130
선박	중국	90	중국	90
반도체	미국	110	미국	110
디스플레이	중국	90	중국	110
무선통신기기	중국	90	중국	11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8).

들었지만 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멀리보고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 외환위기 직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수순이었다. 양적인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저부가·저기술 위주의 산업구조가 체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중국시장이 열렸다. 굳이 질 높은 제품을 중국에 팔 필요가 없었고 기업들의 한계사업 부문이나 한계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또 박리다매(薄利多賣)형 생산구조는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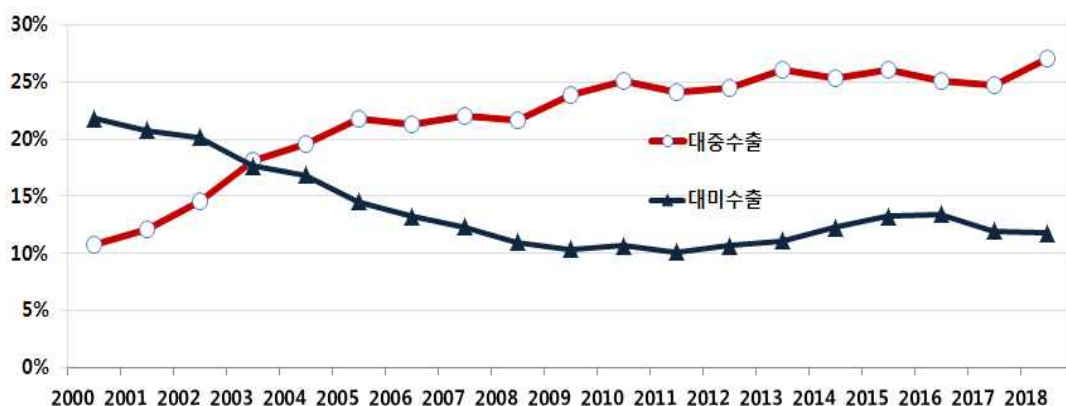
두 번째의 기회는 바로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였다. 외환위기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외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당시 미국, 일본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자산시장과 제조업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하였고 이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힘을 빚대어 당시 G2(Group of 2, 중국과 미국)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선진국 제조업이 구조조정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우리 제품들은

달콤한 독약인 반사이익을 얻었다. 많은 국가들이 힘겨워하던 그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찬사를 받았던 기억도 있다. 돌이켜보면 펀더멘털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성장과 선진국들의 구조조정이라는 우호적 대외여건 때문이었다. 현실의 달콤함에 취해 자신의 실제적 경쟁력을 살피지 못했던 무지와 나태가 결국은 지금 우리 주력 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주력 산업 위기의 본질은 중국이다. 중국경제가 한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위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문제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지난 2000년 기준 우리 대중(對中) 수출의존도(전체 수출에서 중국시장으로 가는 수출 비중)는 10.7%에 불과하였다. 당시 대미 수출의존도(2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2018년 대중 수출의존도는 약 27%에 달하고 있다.

<그림 9-3> 한국의 대중국수출/총수출 및 대미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18b)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 비중은 전산업의 14.3% 그리고 제조업의 38.3%에 달하고 있다. 즉 우리의 주력 산업은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진다. 중국경제가 좋으면 주력 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정 국가의 경기 변동에 우리 산업들이 휘둘린다는 점은 언젠가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함과 동시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경험이나,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시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

* 2018년은 1-11월 누계.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은 바로 중국 제조업의 빠른 추격이다. 세계의 시장에서 세계의 공장(단순히 가공무역으로 만들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 ‘중국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 버린 중국 제조업의 변화인 것이다. 이제 중국 제조업은 한국 제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국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시장 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제품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한때 중국시장을 장악했던 한국산 스마트폰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1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자동차는 점유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쟁은 가격경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구도였기에 품질과 기술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중간 경쟁은 비가격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KISTEP(2009, 2011, 2013, 2015, 2017)의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2018c)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지난 2008년 2.7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축소되었다. 이대로라면 2020년 전후로 주요 부문에서의 기술격차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해마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새로운 자동차 생산기지는 오랫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GM사태 이후로는 있던 자동차 공장마저 문을 닫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90%에 달한다. 주력 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을 보고 나가는 것이다.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한국에서 수출을 통해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관세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현지 인력 채용에 따른 해당국 정부의 직·간접적 혜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기의 해외진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인 생산성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만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다. 여기서 생산비용이 아닌 생산성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생산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도 분명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26.8시간이 걸리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21~23시간 정도이다. 또한 어떤 주력 산업 내 모기업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다른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고부가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과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성과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데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 실적만큼의 노동비용 분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인건비는 최소 동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임금은 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인 것이다. WEF(2018)에 따르면 2018년 노동부문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형편이 없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의 경우 140개국 중 124위, 정리해고비용 경쟁력 114위 등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넷째, 산업계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토를 들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경시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의 중추가 되는 산업계가 사회의 관심 밖으로 내쳐지거나 심할 경우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은 언제부터인가 규제 대상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도권입지규제, 환경규제, 경영권 제한, 상생규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동네북이 되고 있다. 규제는 쌓여만 가는데 있던 규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규제 측면만 보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WEF(2018)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한

국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림 7-4> WEF(The World Economic Forum)의 한국 노동부문 경쟁력 순위*



자료: WEF(2018).

보고서 내 정부규제 부담 정도(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보면 2018년 현재 한국은 79위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인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순위가 한참 밀린다. 지난 정부들도 그랬지만 현 정부도 항상 규제개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규제를 체감하는 정도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2016년 동안 행정부에서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 건수는 연평균 1,0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하루에 세 개 꼴로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현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성장 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개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는 점에 그나마 희망을 가진다. 또 다른 기업에 대한 경시풍토는 반기업 정서이다. 과거 개발연대 시대의 정경유착 그리고 노동자 탄압 등과 같은 기업들의 얼룩진 과거를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그리고 일부 기업의 갑질 행태 등이 더해지면서 사회가 기업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그러한 왜곡된 시선 속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우리 주력 산업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피하고 현실에만 안

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다가온 시선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 140개국 기준.

4. 맺음말

1) 신성장 동력이 대안이 아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 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려운 지금의 주력 산업을 대신할 새로운 주력 산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찾고 있다. 기술과 산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신기술들이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이전 정부들부터 지금까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 발굴이 갖는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즉 한국에서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내기에 좋은 아젠다이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7-2〉 역대 정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

	G7프로젝트 (‘92~’02)	차세대성장동력 (‘03~’08)	신성장동력 (‘09~’13)	미래성장동력 (‘14~’17)	혁신성장동력 (‘18~)
정부	14·15대 정부	16대 정부	17대 정부	18대 정부	19대 정부
키워드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주력 산업의 기술력 확보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ICT융합	혁신성장
사업 분야	18대 분야	10대 분야	17대 분야	19대 분야	13대 분야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8c).

솔직히 대부분의 산업계에서는 신성장 동력에 큰 관심이 없다. 우리 산업계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경험상 ‘기술’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과연 우리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 지난 14대 및 15대 정부(1992~2002년)의 「G7 프로젝트」, 16대 정부(2003~08년)의 「차세대성장 동력」, 17대 정부(2009~13년)의 「신성장 동력」, 18대 정부(2014~17년)의 「미래성장 동력」, 현 정부의 「혁신성장 동력」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두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을 타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신기술들이 결국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마치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스운 것은 현재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말을 쓴다. 즉 생산 시스템 혁신이라는 협소한 범위에서 그들은 손에 잡히는 실체를 가진 부가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나라처럼 그 자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신기루에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유행중인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력 산업의 위기는 당장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된다는데라도 그 시기는 한참 후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2) 주력 산업 위기 극복 자체가 중요하다.

답은 정해져 있다. 자꾸 대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위기 그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그것대로 찾아 나가되, 위기의 주력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조선업의 위기는 이전 정부들이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구조조정은 정치권에서 보면 표를 잃게 하는 이슈이다. 구조조정에 동반되는 인력의 감축은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 어렵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보다 여건이 좋은 투자처는 널려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한국 시장의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해서는 오래지 않아 한국에서 우리 주력 산업들의 생산기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절실하다.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대기업의 경제적 파워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것들이다. 공감이가 가는 부분들도 많다.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져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인은 아니다.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소기업 강국이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경제는 현실이다.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주력 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용기 있게 주장하고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없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혹시 자만과 나태에 빠지지 않았었나? 우리는 혹시 나아가지 않고 지키려고만 했었나? 우리는 혹시 사회의 반기업정서 탓만 하고 정부의 정책 탓만 하고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었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보기는 해보았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때이다.

Abstract

The Causes of Major Industrial Crisis and Countermeasures

Joo, Won

The recent crisis in the Korean economy means a trend of falling mid- to long-term economic growth. The gap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now narrowed to less than 1 percent point. This does not signify that Korea has developed its economy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Korean economy has fallen into a low-growth phase despite the need to keep up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main industry is in crisis.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currently leading Korean economy, is facing a serious crisis, excep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main industries is also declining with speed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 The biggest cause of the major industrial crisis is our pride and laziness. Industrial restructuring was needed, but for various reasons, we missed a good opportunity.

Second, the more realistic cause is the fast pursuit of Chinese manufacturers. Chinese manufacturing has become the factory of the world market, and now, it is at the level where it can compete with Korean manufacturers and the global market. Therefore, our main industry is losing its share to China. Third, the rigidity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cannot be free from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The wage structure and rigid labor market which are determined regardless of corporate performance, are important factors that force companies to move abroad. Fourth, the economic-supporting industry has been neglected or receiving negative attention from the society. With regulations being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social atmosphere, anti-business sentiment has recently spread,

weakening motivation for corporate activities.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is crisis of the main industries is not to look for any uncertain alternative such as new growth engines, but to focus on the main industrial crisis itself. While gradually searching for the new growth engine, we should first solve the problems of the main industries in the crisis. To do so, first of all, restructuring of major industries that are deemed to be less competitive should not be delayed. Second, we need to provide better condi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increase domestic investment. Third, more realistic industrial and corporate policies are needed. Finally, the industries should undergo self-reflection and try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참고문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호.
- 한국경제연구원(2018), “주력업종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 보도자료(2018.11.26.).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상황』.
- 현대경제연구원(2012), “고성장-저부가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현안과 과제, 12-40.
- _____ (2013),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주평, 13-37.
- _____ (2014),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경제주평,
14-45.
- _____ (2018a),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와 활로”, 경제주평, 18-14.
- _____ (2018b),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중국경제위기 전염 가능성
에 대비하자”, 경제주평, 18-28.
- _____ (2018c), “신성장 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산업측면에서 바라본 신성
장 동력, 경제주평, 18-40.
- Gartner(2018), 『5 Trends Emerge in the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8』.
- IMF(2018a),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8)』.
- _____ (2018b),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8)』.
- KISTEP(2009), 『2008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 _____ (2011), 『201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 _____ (2013), 『2012년 기술수준평가』.
- _____ (2015), 『2014년 기술수준평가』.
- _____ (2017), 『2016년 기술수준평가』.
- WEF(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UNINOMIC REVIEW

IMF (www.imf.org).

OECD (stats.oecd.org).

UNIDO (www.unido.org).

Vol. 2 No. 2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종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일 | 2019년 03월

발행일 | 2019년 03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OBEAK FOOD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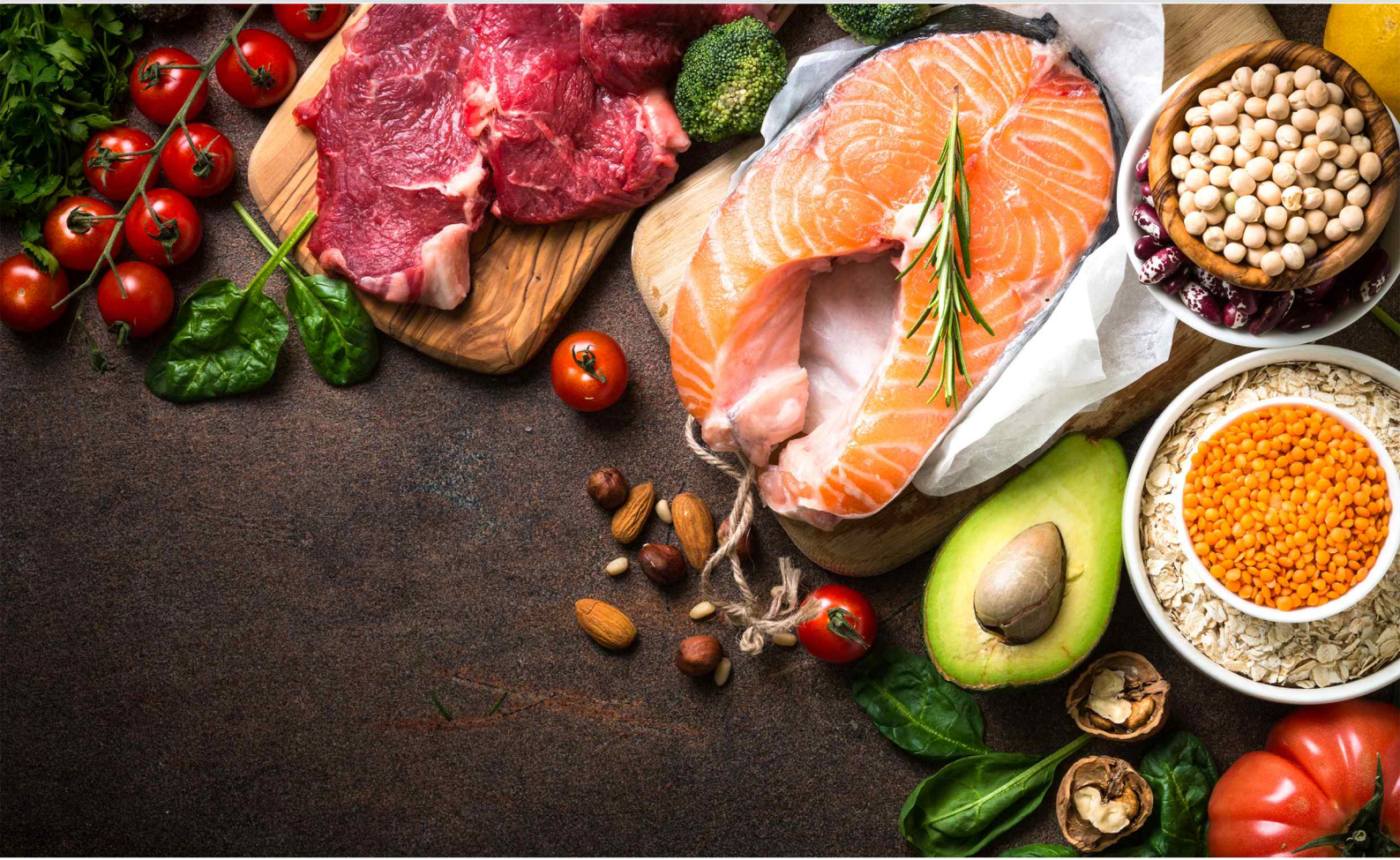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안전 기준인 HACCP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가공 선도적 기업

(주)코빅푸드는 최첨단 생산설비, 선진의 육가공 기술,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축산물 수입, 생산, 유통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기업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 및 고품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코빅푸드는 한국의 축산물 공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형 유통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기업,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주)KTSC(구.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72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분별한 식자재의 개별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모든 관광호텔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수입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KTSC가 직수입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고의 프리미엄 식자재를 온라인 쇼핑몰 ekt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 및 외식업체 공급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및 신선 채소를 비롯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식자재



전국 유통망 구축. 신속한 배송

4,000여평 규모의 KTSC 물류센터와 본사, 전국 지사, 종합물류센터 연결



Total Food System

한 곳에서 구매하여 일괄 배송을 실시하는 One Stop Shopping

UNINOMIC

VOL.2 No. 2

REVIEW

ISLAM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The proposition of our company to enter Egypt
Yu Jeong KIM

Understanding of Turkish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Korea's cooperation with Turkey
Hae Seon PARK

Rapidly changing Middle Eastern political dynamics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Jeong Min SEO

What is Islam Economy? Sung Hyun SON et al.

Background and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in Saudi Arabia Gwang Ho Yu et al.

Iran Crisis, How does Korea deal with?
Ki Yeon Koo

Iraq Su Jeong LEE

SPECIAL

Survival Strategies of Korea Manufacturing Sectors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eong Hoon KIM

The Causes of Major Industrial Crisis and Countermeasures
Won JOO



9 772635 583005
ISSN 2635-5833